

「벤처기업 육성 3개년 계획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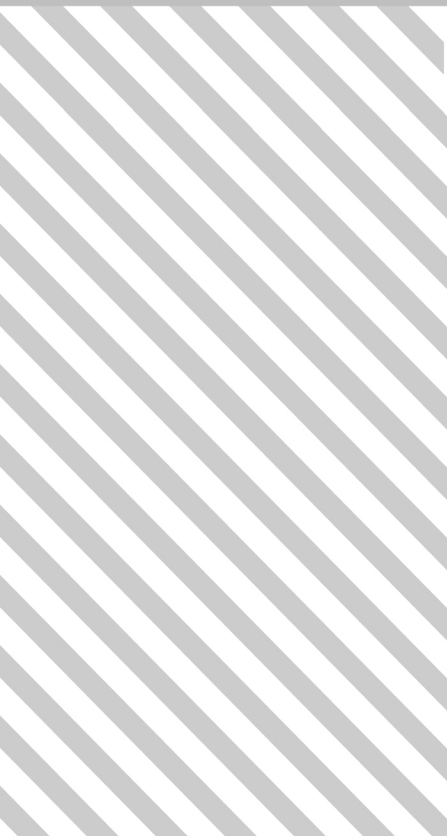
2021. 11.

목차

I. 서론	3
1. 벤처기업 정책의 중요성	3
2. 선행연구 분석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I.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 분석	21
1. 벤처기업 정책 분석 개요	22
2. 2017년 이후 벤처기업 정책의 흐름	28
3.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 분석	35
III. 국가간 프레임워크 비교 연구	40
1. 미국	40
2. 중국	52
3. 영국	63
4. 독일	73
5. 인도	83
6. 이스라엘	90
7.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99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05

1. 해외 네트워크 강화로 본글로벌 추구 106
2.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 107
3. 기업이 기업을 키우는 모험자본시장 구축 108
4. 성공한 선배 창업자의 엔젤투자, 연쇄창업 문화 조성 109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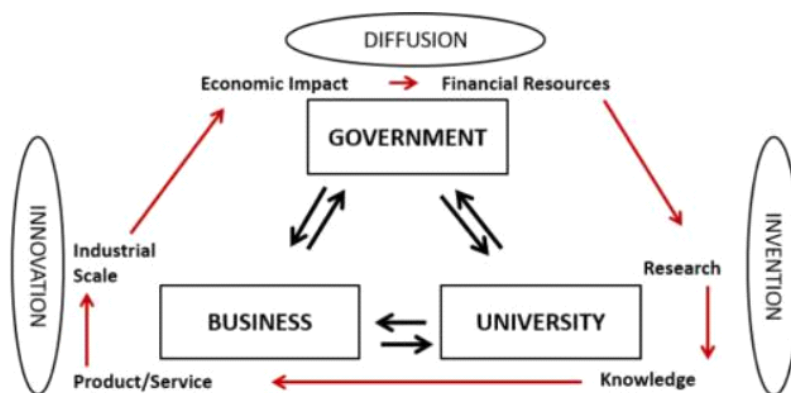
1. 벤처기업 정책의 중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벤처기업 정책의 중요성

가. 연구의 배경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제는 혁신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 경제학의 쉘페터 학파(Schumpeterian)에서는 장기적 경제 성장은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견인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대학 등으로 구성된 ‘혁신체제’가 중요함을 강조

〈그림 1-1〉 쉘페터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의 3단계설(Schumpeter's Trilogy)



* 자료: Chais et al.(2018)

- 혁신체제가 잘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인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도록 이끌었음
 - 캘리포니아의 GDP는 2조9400억 달러(약 3666조원) 수준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터넷, 핀테크, 통신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오히려 2020년 역대 가장 큰 벤처투자를 끌어냈고, 2021년에는 212개의 역대 최대 규모의 유니콘 기업을 발생시킴
- 즉 벤처기업의 탄생과 회수의 선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혁신체제는 위기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국가 경제의 구축에 기여
- 기존 연구는 이러한 혁신체제의 구축에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2벤처붐”도 일관된 정책의 지속성에서 비롯했음을 지적
 -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는 저서인 「기업가형 국가」에서 애플, 구글 등의 핵심 기술이 미국 정부의 직접투자의 산물임을 지적하며, 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장기적 위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공적 영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다수의 국내 기존 연구에서도 한국 벤처기업의 성과에 공적 영역의 정책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음
 - 강원진, 이병현, 오왕근(2012)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에게 정부정책자금의 활용은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하며, 창업기에서 정부정책자금의 활용은 타 외부자원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침
 - 이종훈, 정태현(2016)은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임
 - 특히 2005년부터 꾸준히 지속하여 성장해온 모태펀드는 “제2벤처붐”의 결실로 이어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함을 보여줌
- “제2벤처붐”이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첫 번째 벤처붐처럼 버블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체제의 선순환으로 자리 잡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함

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기존 연구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제가 경제 성장 수렴 단계에 진입한 국가에 새로운 성장의 동인이 될 수 있음과 이를 위해 인내자본을 감당하는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2016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고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2021년에 대한 1차 계획을 2018년 12월에 최초로 수립했으며, 2022년~2024년에 대한 2차 계획은 2021.12월까지 수립 필요
- 한편 벤처창업기업은 혁신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서 코로나19의 경제 타격 아래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 “제2벤처붐”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 국내외 벤처기업 정책의 현황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비전과 전략의 제시 필요
 - 한국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해외 주요국의 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
 -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공공구매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의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필요

2. 선행연구 분석

가. 벤처기업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 벤처기업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수혜 여부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 실증 분석 연구가 다수이며, 대다수의 분석결과가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성과 또는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강원진, 이병현, 오왕근 (2012).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35-45

- '08년 4월 기준 벤처 확인기업 14,275개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인 200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벤처기업의 외부자원 활용, 특히 외부협력 네트워크 활용, 정부정책자금 활용과 벤처캐피탈 자금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내부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외부협력 네트워크, 정부정책자금 및 벤처캐피탈 자금의 활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술혁신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내 벤처기업에게 정부정책자금의 활용은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며, 창업기에서 정부정책자금의 활용은 타 외부자원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송치승, 박재필 (2013).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기업경영연구, 20(5), 215-240.

- 벤처기업지원정책에 대한 405개 벤처기업의 설문결과와 성과변수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결정 요인을 분석

- 벤처기업 관점에서 세제지원정책과 자금지원정책이 가장 만족스러운 벤처기업 지원정책으로 평가되었음

○ 이종훈, 정태현 (2016).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출자금의 초기단계기업 투자에 대한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75-87

-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 분석함

-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분석
-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남
- 즉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큼

○ 김윤정, 서운교, 홍정임 (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학회지, 21(2), 636-662

-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기업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의 조절 효과를 분석함
-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요인 중 연구개발(R&D) 인력 비율이 타 벤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기업, 자사브랜드 미보유 벤처기업, 그리고 종업원이 증가한 벤처기업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짐
-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도성장 단계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임

○ 신일순, 김현수 (2020). 정부지원이 바이오 중소기업의 R&D 성과에 미치는 효과: 자금지원과 간접지원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42(2), 153-183

- 국내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R&D에 있어 정부지원을 더 받는지, 정부지원이 R&D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부지원의 종류(자금지원 및 간접지원)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분석
-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300개사(제조업 2,621개사, 제조업 이외 679개사)를 표본으로 분석
- 국내 바이오 중소기업은 R&D 자금지원과 간접지원 모두 일반산업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 바이오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

- 하지만 처치 효과 모델을 이용한 결과, 자금지원이 바이오산업의 R&D 성과에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간접지원의 경우 의약 이외 바이오 기업에서만 R&D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정경희 (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59-70

-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업력 3년미만)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
- 연구대상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17~'19년 창업기업 297개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수 간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 분석 결과, 매출은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반면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은 창업멘토링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임

○ 김재현, 김지영 (2021). 공공조달수요를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벤처창업연구, 16(2), 153-161

-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수요 측 지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비중을 5.7%에서 10%로 확대했을 때,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생산이 약 46.17% 증가하고 벤처기업 수는 약 150%가 증가하며,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는 약 6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공공조달 지원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부문에 대한 지원금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해 줄 때 경제적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가 공급 측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 확대가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가격 하락을 야기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구축하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시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측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금 지급을 축소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 전기영 (2021). ICT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43(1), 207-230

- ICT 벤처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벤처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 성장이 정부 지원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
- 창업 단계의 기업은 연구개발 지원이 매출액증감률에, 자금 지원이 고용증감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기 기업은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이 매출액증감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벤처기업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벤처기업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크게 창업, 스케일업, 벤처 투자 정책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며, 벤처기업 제도 자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었음

○ 김나랑, 홍순구, 이현미 (2014). 근거이론에 기반한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33-45

-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4년 4월 청년 벤처 창업가 1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질적방법론)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
- 분석결과 대부분의 청년 벤처 활성화 정책이 폐쇄적인 참여 구조,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정책, 단기 자금 지원, 획일적인 교육 및 지원, 창업후 후속 지원 정책의 부족, 과도한 행정 업무 요구, 성과에 집착한 단편적인 지원이 많아 창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였음
-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하여 Co-creation* 기반 IT 플랫폼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음

*Co-creation: 한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외부 전문가들 간 결합으로 창조적인 융합가치를 만들어 내는 개방형 혁신에서 더 나아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단계

○ 심용호, 길운규, 김서균 (2015).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의

효과성 분석.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6(4), 121-130

- 문헌조사(보도자료 등), 인터넷조사(기관별 규제개선 현황파악), 설문조사(CEO대상), 전문가자문(CEO, VC 등 업계 관련자의 추가의견 수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자금조달, 판로확대, M&A 및 IPO 활성화, 인재유치, 진입확대, 부담완화, 재창업 촉진, 입지확보 관련 내용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규제개선 내용 중에서는 창업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조달할 경우 초기 창업기업의 불리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판단하였음

○ 조병문, 신현한 (2019). 스타트업 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1029-1053

- 엔젤캐피탈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금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소외되어 있는 문제의 개선 필요
- 엔젤캐피탈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양대 축이며,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
- 이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제도를 통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간 합병 검토가 있으나, 당분간 지금처럼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에 효율적임
- 창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와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사례

○ 김선우, 진우석 (2020).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STEPI Insight, 1-30

- 벤처기업 정책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함
- 천억 개의 벤처기업 중 3년간 연 평균 20% 이상 성장한 가젤기업은 28개에 불과하여, 적어도 벤처기업의 1%는 스케일업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금융, 시장, 인재, 문화, 정책의 5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투자 대형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활성화 등

○ 홍은영, 안기돈, 성을현 (2020). 기술기반 창업기업 중심의 벤처우대제도 법령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2), 111-125

- 기술기반 창업기업 시점에서 현재의 벤처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본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 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웹페이지에서 ‘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569개의 관련조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569개의 조항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규정근거별, 수단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
-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벤처우대제도’ 정립이 필요하며, 부담 완화에 치중된 현재 혜택을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우대 확대로 전환할 필요성 제기
- 재무와 생산 분야에 치우친 혜택을 연구와 인력 분야로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

○ 최영근, 전성민, 이승용 (2021) 벤처창업 초기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1-184

- 국내 창업벤처 및 육성 지원책을 고찰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방식의 개선, 투자 주체의 확대, 그리고 투자 유형의 다변화를 제시
- 차등의결권 제도 개선: 초기투자 시에는 벤처캐피탈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특정사안에 대한 ‘Class 의결권’을 도입하고, 상장 시에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으로 개선할 필요
-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시 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업 가치를 가능한 한 인정할 수 있도록 투자가치 조정 및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함
- 대학창업펀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신기술사업화에 집중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들이 투자조직으로서 강화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민간 투자조직들이 외면하고 있는 초기단계 기술기업들에 대한 공공 벤처캐피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다.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framework)에 관한 연구

□ 벤처기업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적용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창업,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정책 목표가 혼재되어 있어 벤처기업 육성에 특화된 정책 프레임워크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하규수, 홍길표, 이춘우 (2017). 2002-2012년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특징 연구. 벤처창업연구, 12(1), 15-24

-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창업정책이 어떤 기조로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언함
-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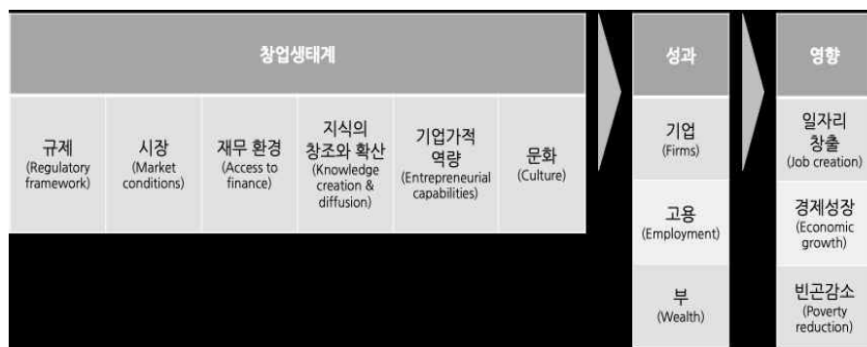
〈표 1-1〉 2002-2012년의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프레임워크

	창업 초기단계	벤처투자 성장단계	벤처투자 회수단계
비재정·금융부문	벤처확인제도 벤처입지 창업보육사업 인력유입촉진 벤처기업 역량강화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벤처 재투자 촉진 벤처기업인 재가지원
재정·금융 부문	조세지원 신용보증 창업자금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모태펀드와 VC 활성화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 거래시장 활 성화 M&A 등 기업·기술 거래시장 활성화

○ 이우진, 오혜미 (2019). 2013~ 2016년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4(1), 129-159

- 본 논문은 국내 선순환 창업생태계의 구성을 지원해온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을 분석함
- OECD의 창업생태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창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분석 결과, 그동안 국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며,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인인 규제, 시장, 재무환경, 지식의 창조와 확산, 기업가적 역량, 문화가 점차 균형적으로 조성되어 옴

〈그림 1-2〉 OECD의 창업생태계 프레임워크



○ 안종배 (2020). 해외 주요국 벤처육성 모델의 국내 적용 적합성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1), 121-133

- 50명의 벤처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해외(미국, 이스라엘, 독일, 핀란드, 중국)의 벤처 육성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 중 국내 벤처 발전을 위해 유용한 모델, 적용이 용이한 모델, 적용에 적합한 모델, 그리고 국내 적용이 적합한 이유와 부적합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벤처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핀란드의 벤처육성 정책이 유용성, 용이성, 적합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특히 핀란드처럼 산, 학, 관, 연이 유기적인 활동을 통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벤처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내수 뿐 아니라 글로벌 벤처육성 전략(모범: 핀란드, 이스라엘), 교육을 통한 창의성,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 제공되는 벤처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함
- 성공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Davari, A., & Farokhmanesh, T. (2017). Impact of entrepreneurship policies on opportunity to startup. Management Science Letters, 7(9), 431-438

- 이란의 스타트업 정책 사례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스타트업 정책이 이란 스타트업의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
- 이와 더불어 다양한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정리함

〈표 1-2〉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 요약

Summaries of entrepreneurship policies frameworks

Framework	Main Policies
GEM	basic requirements, Efficiency enhancers, Innovation
The OECD	regulation, market availability, financing, cultural programs, education and training
Hall Framework	economic inputs and resources, public policies and entrepreneurial outcomes
Canadian Atlantic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ramework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policies towards motivation, opportunity and skills improvement
Entrepreneurship Framework based on Comparative Studies of Countries	Promotion, education, improving the environment, financial & business supports, target group strategies
Kuzilwa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Framework	contextu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UNCTAD Framework	increasing access to finance, facilitating entry and exit and government support programs
Lee's framework	Maximize gains and minimizing losses

○ Egan, E. J. (2021). A framework for assessing municipal high-growth high-technology entrepreneurship policy. Research Policy, 104292.

- 고성장, 하이테크(HGHT: High-growth, high-tech.) 벤처기업 정책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분석함

-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8개의 measure는 다음과 같음

- * 먼저 VC의 성과, 질 측정 관련: (1) Apportioned Investment Value(각 deal마다 참여한 VC들의 투자액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투자 가치) / (2) Apportioned Exit Value(IPO나 M&A를 통해 발생한 순수입을 위의 Apportioned Investment Value에 따라 배분한 금액) / (3) MOOMI Ratio(Money-Out-Over-Money-In의 약자로서, 초기 투자금액 대비 엑시트 금액의 비율임)
- * (4) 이니셔티브의 pipeline이란, 해당 이니셔티브가 처리하고 관여하는 새로운 HGHT기업의 숫자이며, 특히 아직까지 VC펀딩을 한번도 받지 못한 스타트업에 국한됨. (5) Raise rate란, 벤처 파이프라인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특정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이후 첫 라운드의 VC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비율을 의미. (6) cost per raise란 이니셔티브의 비용 대비 해당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벤처들의 총 투자 raising 볼륨을 의미하며 cost-benefit 측도임. (7) Repeat VC란, 동일 VC로부터 투자를 다시 받는 경우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니셔티브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8) ESO expertise는 이사회 인원수, 인원 구성 비율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이니셔티브의 전문성임

○ Wisuttisak, P. (2021). Comparative Study on Regulatory Frameworks for Promotion of Startup Businesses and SMEs in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and Thailand. In Investment in Startups and Small Business Financing (pp. 3-32)

- 정책 프레임워크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임

- 각 국가는 서로 상이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으며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4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적 유사점 및 차이점과 그 함의를 분석함

〈표 1-3〉 아시아 국가의 벤처기업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

Frameworks for Startups and SMEs' Promotion	Countries
1. Specific laws and policies for Startups and SMEs' Promotion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issued specific laws for promotion of startups and SMEs Malaysia resorted to government policy and cooperation as a mechanism to build up startups
2. Government grant for startups and SMEs	All four countries provide government grants for startups
3.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s and SMEs	All four countries have established financial schemes which help support startups and SMEs — Special loans and Credit guarantees
4. Taxes Incentives	All four countries have issued Tax regulation incentives for startups and SMEs (Business taxes exemption or other taxes benefit)
5. Overseas Startup Incentives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provide effective government schemes to attract overseas startups Japan has some specific incentives for overseas startups Thailand lacks harmonized schemes and incentives for the overseas startups — Issue in immigration laws and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6. Private joint venture under government support and crowd funding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provide reliable programs for joint ventures — The established corporation can cooperate with the startups All four countries have set policies for crowdfunding Thailand , while having an initial policy to support joint ventures, lacks effectiveness
7. Government program for ICT Advocacy and Consultancy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provide platforms and training courses for Startup ICT transformation Thailand , while having a training program, lacks appropriate policy driver for Startup ICT transformation
8. Nurture to sustain market uncertainty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various regulations supporting the sustainability of startups and SMEs to survive in the market Japan and Malaysia , at the middle ground, have some certain programs but do not have program continuity for startups and SMEs to sustain market uncertainty Thailand has applied initiation policy, but lacks continuity to nurture the startups and S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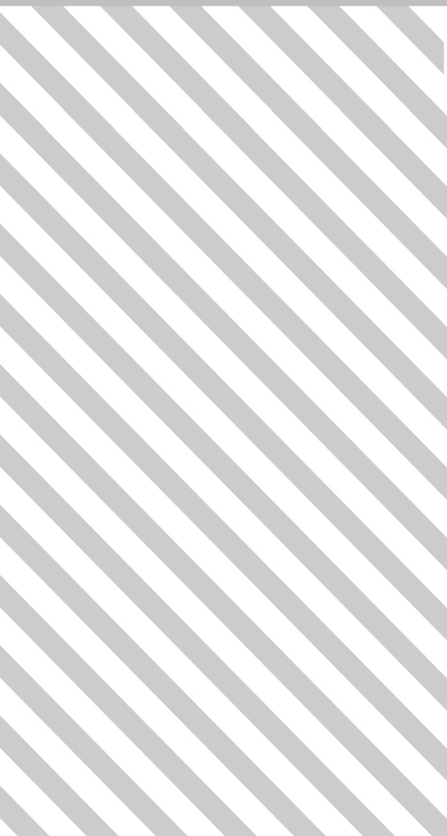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기존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벤처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상이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 분석 틀은 창업생태계 프레임워크, 스타트업 정책 프레임워크, 기업가 정신 정책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경계가 모호함
- 한국의 기업 정책은 창업 정책과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계획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고려한 분석 틀은 제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정책과 벤처기업 정책의 중복적이면서도 상이할 수 있는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함
 - Davari, A., Farokhmanesh, T.(2017)의 연구에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주체별로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와 기준이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 Wisuttisak, P. (2021)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4개국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각 국가는 정책 방향과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일관된 틀을 적용하기 어려움
 - 즉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의 특성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기업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벤처기업 정책과 환경을 비교 분석함
 -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순위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이스라엘의 7개국을 벤처기업 정책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비교·분석 시행
- 국가간 비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 분석

II

- 
1. 벤처기업 정책 분석 개요
 2. 2017년 이후 벤처기업 정책의 흐름
 3.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 분석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 분석

벤처기업 육성 3개년 계획 수립 연구

[2장 주요내용]

□ 2장은 중견기업의 혁신 실태에 대해 정량적 빅데이터 분석과 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1. 빅데이터 기반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of Big Data)

- 가. 분석 개요
- 나. 데이터 설명
- 다. 주요 변수의 선정
- 라.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 마. 기업 규모 별 주요 변수의 연도별 추이(2008~2018)
- 바. 기업의 혁신 활동 결정 요인
- 사. 기업의 혁신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2. 실태조사 분석(Survey Analysis)

- 가. 실태조사 개요
- 나. 중견기업 벤처투자 및 M&A 현황
- 다. 외부 혁신 추구 기업 응답 결과 분석
- 라. 외부 혁신 비추구 기업 응답 결과 분석
- 마. 외부 혁신 추구 여부에 따른 기업 특성 비교 · 분석

3.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가. 중견기업은 양호한 수익성으로 현상을 유지 중
- 나. 외부적 혁신에 적극적인 대기업과 미온적인 중견기업
- 다. 창업자가 경영하는 중견기업이 외부적 혁신에 가장 소극적
- 라. 중견기업은 성과를 바탕으로 외부적 혁신 시도
- 마. 중견기업의 벤처투자는 미래 효율성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 바. 정책적 시사점

1. 벤처기업 정책 분석 개요

가. 벤처기업 정책의 정의

- 1절에서는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벤처기업 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함
- 벤처기업 정책의 개념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함
 -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함
 - 정책의 구성요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창업정책과의 포함 관계가 명료해야 함

〈표 2-1〉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의 4대 구성요소	정책의 3대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수단	실질적 정책수단
			실행적 정책수단
	정책대상자		
정책결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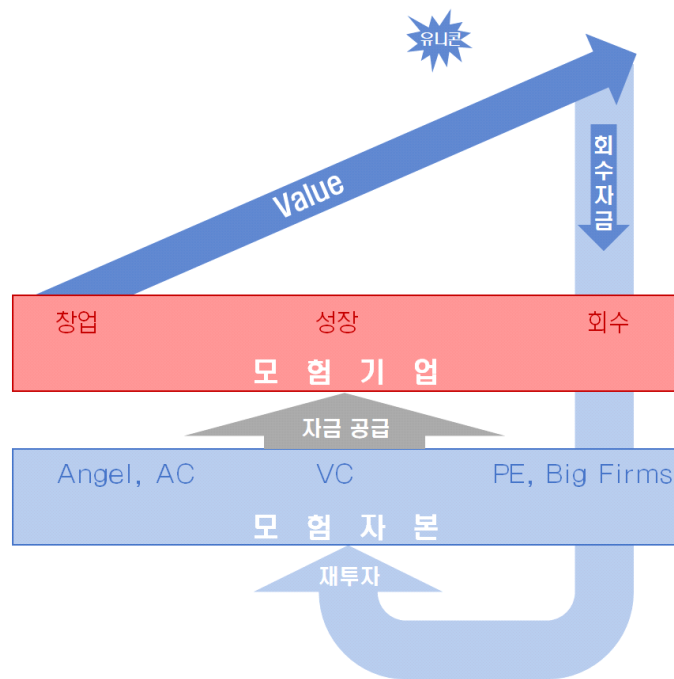
-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은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협의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광의적으로는 혁신성장을 추구하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 즉 벤처기업 정책은 모험기업과 모험자본을 대상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이뤄 지속적 혁신성장을 추구하고자, 지원금·간접투자·간접지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부 결정 방안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는 전통적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CVC, PE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모험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인 ‘모험기업’을 사용함

□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정책의 영역 및 대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음

○ 벤처기업 정책의 영역 및 대상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에 있는 모험기업과 모험자본, 그리고 선순환을 이루는 전체 체제로 볼 수 있음

<그림 2-1> 벤처기업 정책의 영역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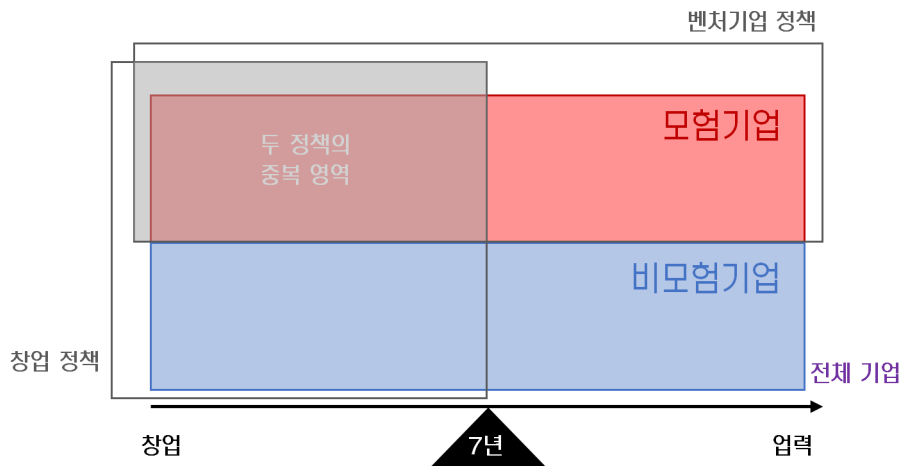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창업정책과의 비교

- 창업정책은 창업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칭함
 - 즉 창업기업 중 모험기업*은 창업정책과 벤처기업 정책의 공통적인 정책 대상이 됨
 - 다만 업력 기준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모험기업 여부는 시간의 흐르면서 바뀔 수 있음
 - 예를 들어, 창업 당시 모험기업이 아니었을지라도 업력이 쌓이면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신사업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 모험기업으로 진입함
- *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그림 2-2〉 대상 기업으로 본 벤처기업 정책과 창업 정책의 포함 관계



*자료: 저자 작성

- 정책의 구성 요소로 비교한 벤처기업 정책과 창업정책의 비교하면 <표 2-2>와 같음
 - 벤처기업 정책의 대상은 모험기업 및 모험자본이며, 창업정책의 대상은 창업기업임

○ 벤처기업 정책의 목표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단계별로 모험기업과 모험자본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창업정책의 목표는 창업지원계획을 참고하였음

〈표 2-2〉 벤처기업 정책과 창업정책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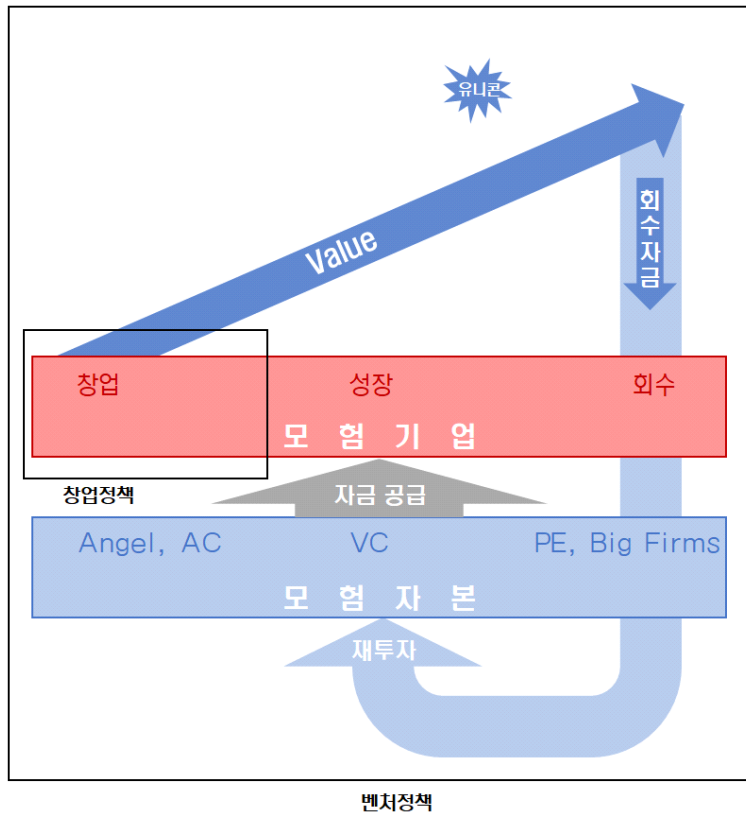
	벤처정책	창업정책
정책비전	선순환 벤처생태계(예시)	혁신 창업국가
정책목표(관리지표)	- 창업수(창업지표) - 아기 및 예비유니콘 수(성장지표) - 회수 및 재투자 지표 - 단계·별주체별 벤처투자금액	- 기술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지원 - 기업가정신 순위 - 창업생존율
정책대상	모험기업 및 모험자본	창업기업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2-1〉의 벤처기업 정책의 대상과 영역 측면에서 창업정책과 중복적인 부분을 도식화하면 〈그림 2-3〉과 같음

○ 벤처기업 정책의 영역 및 대상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에 있는 모험기업과 모험자본, 그리고 선순환을 이루는 전체 체제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창업정책의 대상과 영역에도 중복적으로 속함

〈그림 2-3〉 창업정책과 중복되는 벤처기업 정책의 대상과 영역



*자료: 저자 작성

다. 벤처기업 정책 분석의 프레임워크(framework)

- 이상의 논의에서 정의한 벤처기업 정책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벤처기업 정책과 환경을 분석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함

〈표 2-3〉 벤처기업 정책 분석의 프레임워크(framework)

	모험기업	모험자본
창업	- 창업지원 정책과 공통 부문	- 모태펀드 - 액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자 대상 정책
성장	- 유니콘 정책 - 스케일업 정책	- 스케일업 펀드 - CVC 지원정책
회수	- M&A 지원센터 운영 - 국내외 네트워킹 지원	- M&A 전용펀드 - <u>세컨더리</u> 펀드
재투자(재도전)		

*자료: 저자 작성

- 〈표 2-3〉과 같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네 단계와 모험기업과 모험자본의 두 대상의 조합을 바탕으로 국내외 벤처기업 정책을 분석함

- 각 나라의 벤처기업 정책 집합을 위와 같은 4X2 매트릭스에 매핑(mapping)하여 그 결과를 주요국 대상으로 비교

2. 2017년 이후 벤처기업 정책의 흐름

- 2절에서는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 분석에 앞서 그동안 이루어져 온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였음
-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서 자리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이후의 정책 흐름에 주목함

가.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추진 배경: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 역동성 저하 / 창업 양적 확대 이루었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미흡 / 주요국에 비해 벤처투자 부족 등 모험자본 역할 미흡 / 투자-회수 및 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 / 점진적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 붐 조성 및 확산에는 미흡
-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목표로 삼음
- (1) 혁신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3) 창업 및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의 세 가지 추진방향 아래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1-1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17. F	중기부
1-2	모기업의 사내벤처·분사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7. F	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1-3	대학·출연처·공공기관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	‘18. 상	교육부 과기부 기재부
1-4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18. 상	중기부
1-5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18. 상	중기부
1-6	TIPS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 확대	‘18. 상	중기부
1-7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금융 확대	‘18. 상	중기부 금융위
1-8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확대	‘18. F	중기부
1-9	초기 창업기업·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17. F	기재부 행안부
1-10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18. 상	중기부
1-11	창조경제혁신센터들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체계화	‘17. F	중기부
1-12	관교창조경제밸리(명성 공로)를 혁신모델로 선도개발	‘17. F	국토부 기재부
1-13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통한 창업기반 확충	‘17. F	기재부
1-14	혁신도시 공공기관내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	‘18. 상	기재부
1-15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2배 확대	‘18. F	중기부
1-16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	‘17. F	기재부 조달청
1-17	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	‘18. F	중기부
1-18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	‘18. 상	중기부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2-1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신설	‘17. F	중기부 금융위
2-2	혁신모험펀드 연계형 대응프로그램 마련	‘17. F	중기부 금융위
2-3	모태펀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18. 상	중기부
2-4	연계투자 소독공제 확대	‘17. F	기재부
2-5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	‘17. F	금융위 기재부
2-6	우리사주·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17. F	기재부
2-7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관 정비	‘18. F	중기부
2-8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18. 상	중기부
2-9	창업투자회사 규제 혁신	‘18. 상	중기부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3-1	코스닥·코넥스·KOTC 제도 정비 및 세계지원	‘17. F	금융위
3-2	연기금·대형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17. F	금융위
3-3	기술·인력지원 체계 강화	‘18. 상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3-4	대기업의 M&A를 인센티브 확대	‘17. F	중기부 기재부 중기부
3-5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	‘17. F~ ‘18. F	금융위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3-6	사업실패시 재산양도·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17. F~ ‘18. F	금융위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3-7	성실집행자 기준 완화 및 조세특례 확대	‘17. F	중기부
3-8	TIPS방식의 제도권 프로그램 신설 등	‘17. F	중기부

나.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17년 11월에 수립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세부 정책 과업 중 벤처 투자 및 회수시장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 국내 신규 벤처투자가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GDP대비 벤처투자 비중 '15년 기준 미국 0.33%, 중국 0.24%, 한국은 0.13%) 될 수 있도록 '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

○ 공공부문 출자(재정, 모태, 정책금융기관 등)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

○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태·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간 운영 및 투자 연계 강화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연계 추진

□ 혁신모험펀드의 조속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출자자원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계획 마련 추진

○ '18년도 혁신모험펀드 재정출자 예산 3,000억원 및 연계 대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보, 기보 출연재원 200억원 반영(모태펀드 출자 2,000억원, 산은 출자 1,000억원, 신·기보 출연 각 100억원)

○ 관계부처 등으로 혁신모험펀드 지원단(기재부, 중기부, 금융위, 산은,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을 구성, 논의

기본목표	주요 추진과제
충분한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	▷ '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혁신창업펀드-성장지원펀드 2개 하위펀드 설치 ▷ '18년중 2.6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1차 조성 ▷ 보증·대출과 혁신모험펀드 투자 연계 강화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 민간부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민간이 자율 제안·주도하는 출자사업 방식 확대 ▷ 운용펀드 규모의 대형화 및 장기투자 적극 유도
모험성 강화, 적극적 투자 유도	▷ 신주 보통주 방식의 투자비중 확대 유도 ▷ 운용사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
운용 투명성 제고 및 펀드간 연계성 강화	▷ 민간전문가 중심 정책펀드 운영체계 구축 ▷ 연계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책펀드간 칸막이 해소

다. 2018년 1월 중기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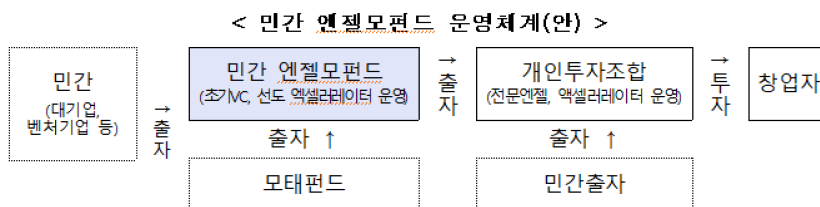
-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업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발표함
-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의 3대 추진 원칙을 제시하여 이전 정책과 차별성을 더함
 - 민간 선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
 - 시장 친화: 수요자 맞춤형 제도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자율과 책임: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어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수요자 입장의 편의성을 제고함

문제점	개선방안	세부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획일적 벤처확인 →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벤처 기업 선별시스템 미흡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① 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 ② 보증대출 유형 폐지, 신기술 성장유형 신설 ③ 벤처기업 금지업종 폐지 (사행·유흥업종 제외)
진입제한, 투자대상 및 펀드운용 방식에 대한 사전규제 → 민간자본 유입의 한계로 자생력 약화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① 벤처캐피탈 진입요건 완화 ② 최소 규제로 펀드운용의 자율성 강화 ③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공급위주의 획일적 벤처투자 견인 →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및 민간 자율성을 제약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	① 민간투자 견인에서 후원으로 운용방식 개편 ② 시장실패 영역에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③ 펀드 운용의 책임성, 효과성 강화

라. 2018년 5월 중기부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 정부는 2018년 5월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등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중기부는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마련함.
-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지역투자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가 주요 내용임

○ 민간 엔젤모펀드(‘19, 200억원) 도입



○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
-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
-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

○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운영하여 엔젤투자자 양성 및 창업기업과 교류를 활성화
- 벤처캐피탈협회·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매칭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투자협회·벤처캐피탈협회·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투자마트도 개최(연 20회)

마. 2019년 3월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벤처 및 창업 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서, 2000년대초 세계적인 벤처창업 붐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2의 벤처 붐” 조성 필요
- 모험자본시장의 유동성 강화로 ‘가벼운 창업’의 양적 증가는 있었지만 기술 창업 등 질적 고도화 및 저변 확대는 여전히 미흡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창업 촉진
 -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 IP기반 자금공급 활성화 및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확대 등 스케일업 지원
 - M&A 전용펀드 매칭 및 재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가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회수·재투자 촉진
 - 규제 샌드박스 활용 지원 및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 강화

바.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20여차례 벤처·스타트업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음
- 이에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다만 민간에서는 제2벤처붐이 우리 경제에 안착되려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
-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유치·글로벌진출 지원, 코로나19로 늘어난 민간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유도,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M&A

활성화 등 요구

(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스톡옵션 제도 개편: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현 `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지원제도 재정비,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를 200억원까지 상향
- 글로벌화 추진: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 현지실증 및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
-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기후 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및 전용펀드 조성 검토

(2)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 모태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허용,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
- 투자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향상: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학원 전문과정 개설 등 통해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
-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규제완화·지원, 모태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3)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 M&A 유동성 공급, 제도개선: 기술혁신 M&A보증 신설, M&A 펀드 확대 등 유동성 공급,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
- 중간회수 및 재투자 지원: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

- IPO 활성화: SPAC 존속합병 외에도 소멸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SPAC 활성화,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고, Fast-Track 방식 신속심사,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3.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프레임워크 분석

□ 2절의 한국 벤처기업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1절에서 제시된 벤처기업 정책의 개념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분석하기에 적절함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정책 계획이 창업, 성장, 회수 등의 단계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모험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계획이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음

□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2-4>와 같음

○ 한국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2-4> 한국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기업	모험자본
창업	-정부 및 공공주도의 창업지원 정책 -높은 수준의 창업비자 프로그램(75점, 1위) -가장 낮은 수준의 창업 규제 -중기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중기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지원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중기부, 대학기업가센터 운영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기부, K-스타트업 사업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중기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통한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 -중기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민간> -최고 수준의 창업률(특히 인구수 대비 창업기업 수) -높은 창업의향 및 인식 -낮은 기업가정신, 혁신형 창업, 생존율	-중기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통한 엔젤투자매칭펀드 -모태펀드
성장	-중기부, 포스트 틱스(Post-TIPS) 프로그램 -중기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중기부, 조달청, 다양한 창업 및 벤처기업 공공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확대 -중기부, 글로벌 펀드 조성 (2013) -중기부,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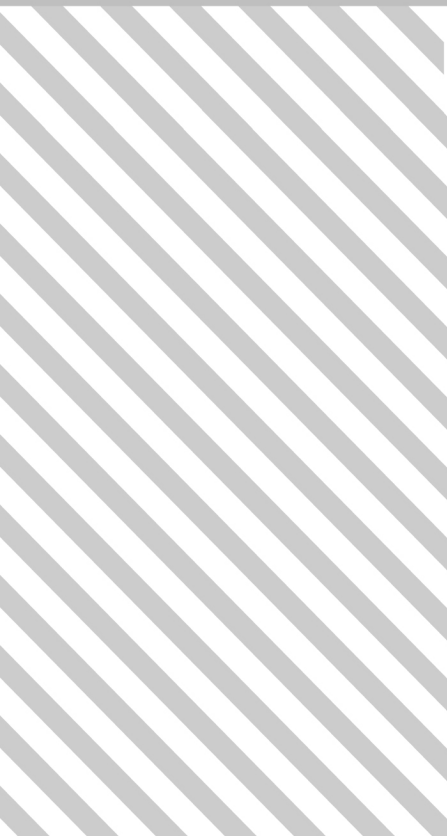
	구매 제도 -조달청,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 지정제도 (2013) -중기부, 브랜드케이(K) 사업 (2019) <민간> -세계 1위 수준의 GDP대비 R&D투자(4.2%로 이스라엘과 함께 1위 수준) -인구대비 특허출원 수 2위(461.2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R&D 투자 비중 및 특허 출원 빈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유럽 대비 우수한 기술역량 -삼성/LG 등 글로벌 선도기업 특허 쏠림 현상	(2020) <민간> -양적으로 발달한 벤처투자 시장(특히 GDP대비)
회수	- M&A 지원센터 - SPAC 활성화	- M&A 전용펀드 - LP 지분 유동화펀드 등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민간> - 회수 수단 중 M&A 비중이 낮은 수준(2%, VC 기준)
재투자 (재도전)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프로그램	

- 한국의 경우 창업 단계의 모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장 풍부하며 실제로 창업 수에 있어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부족한 부분은 재투자 단계의 모험기업에 대한 정책은 재창업패키지 등 일부 존재하나 창업 단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자원 투입이며, 모험자본을 대상으로 한 재투자 단계 대상 정책은 거의 없음
 -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재투자 인센티브 제공의 내용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음
- 회수 단계의 경우 M&A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위해 모험기업과 모험자본 대상의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진 벤처생태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국가간 프레임워크 비교 연구



- 
1. 미국
 2. 중국
 3. 영국
 4. 독일
 5. 인도
 6. 이스라엘
 7.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간 프레임워크 비교 연구

1. 미국

□ 미국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3-1>과 같음

○ 미국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3-1> 미국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 기업	모험 자본
창업	-상무부 경제개발청, 개념검증센터(2011) -상무부 경제개발청, i6 Green 프로그램(2011) -보훈부, 군 퇴역자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2011) -DC-to-VC Summits 프로그램(2011) -미 특허청,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2011) -중소기업청, Startup in a Day Initiative(2015):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하루만에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 창업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 제공 -에너지부(DOE), 에너지 혁신 포털 통한 정보 제공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혁신 허브 프로그램(Go-Biz)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 근본 구축을 위한 창업 교육 실시 -뉴욕주, Startup New York 프로그램 -뉴욕주, Silicon Alley 지원 정책: 스타트업 법 인세 인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신설(2011) -매사추세츠주, 생명과학 산업 진흥법(Chapter 130 of the Acts of 2008): 세금, 인재교육,	-중소기업청(SBA), 임팩트투자펀드와 초기단계 혁신펀드를 조성(2011) -재무부, 신생 시장 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 개정(2011) -뉴욕주, Silicon Alley 지원 정책: 천만 달러 규모의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실시(2014) -매사추세츠주, 생명과학 산업 진흥법(Chapter 130 of the Acts of 2008):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자금 지원 -국방부 주도의 직접투자 수행 공적벤처캐피탈인 인큐텔을 운영하여 초기 기술기업에 인내자본 제공 <민간> -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 인텔 등 대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 실시 -엔젤투자자들의 자발적 협회 네트워크 결성 및 대규모 투자 집행 현상 -자생적 창업 지원 생태계가 매우 발달되어 있음

	장비 및 물품 지원 등 〈민간〉 -산호세 주립대학의 실리콘 벨리 이노베이션 챌린지 -민간,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NFTE, Ernst & Young, Pearson Foundation, Blackstone LaunchPad, TechStars, SUAP조직 등): 멘토링, 아이디어 발굴 등의 활동 지원 -창업에의 높은 인식 수준과 활발한 창업 활동('20년 창업기업 80만여 개) -창업에 우호적인 노동시장	
성장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창업기업지원 -JOBS 법 제정(2012): 기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회계 규정 완화 -Scaleup America Initiative(2014):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확대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뉴욕주, Startup New York 프로그램 -매사추세츠주, 생명과학 산업 진흥법(Chapter 130 of the Acts of 2008):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 지원 〈민간〉 -세계 최다의 유니콘 기업 수(전세계 유니콘 기업 중 절반가량 차지) -세계 1위 수준의 R&D투자 및 기술개발	-JOBS 법 제정(2012): 소액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허용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2015): VC등에 150억 달러 지원 -뉴욕주, Silicon Alley 지원 정책: 5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 조성(2014) 〈민간〉 -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 인텔 등 대기업 중심으로 CVC 투자 활발,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 -높은 비중의 후기 VC투자 -성숙한 민간 주도 벤처투자 환경 -발달한 벤처투자시장(벤처투자시장 규모 세계 1위)
회수	-JOBS 법 제정(2012):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를 신생기업들에 한해 대폭 간소화	〈민간〉 -높은 수준의 M&A를 통한 회수 비중(37%) -IPO, M&A등으로 발달된 회수 시장을 통한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재투자 (재도전)	〈민간〉 -높은 수준의 재창업 및 연쇄창업 비중(17.55%로 1위)	〈민간〉 -성공적으로 회수한 창업자가 다시 투자자 및 사업가가 되는 경우 다수

가. 모험기업

1) 창업

- 상무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개념검증센터(Proof of concept center) (2011):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초기단계 연구에 seed money를 제공하고,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운영

- 상무부 경제개발청, i6 Green 프로그램(2011)
 - 6개의 연방부서를 통해서 미국 내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사업화의 가속화, 새로운 벤처 형성, 고용창출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에 1,200만 달러를 지원
 -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깨끗한 경제와 기술기반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념검증센터를 활용하는 지역사회에 지원. 공공이나 기업, 대학,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됨
-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군 퇴역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2011): 퇴역군인들의 고성장 비즈니스 창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시설을 설립
- DC-to-VC Summits 프로그램(2011): 고위 정부 리더들이 기업가정신의 방해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순회 실시. 전국의 주요 혁신센터 및 혁신도시를 순회하며,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청취하고,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고무시키고, 스타트업 성장의 방해요소들 제거 목표
- 미 특허청, 패스트트랙 특허처리 제도 신설 (2011): 1년 내에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심사기간단축
- Startup in a Day Initiative (2015)
 -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여러 라이선스나 허가서 등을 축소하여 온라인으로 하루 만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SBA)을 통해 지원
- 정부부처, 창업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
 - 중소기업청 주도로 상무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전부 등 40여개 정부부처가 파트너십을 맺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 및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기업의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는 전 단계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 및 관련 서식 등을 통합 서비스로 제공
 -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 안내와 SBDC, SCORE 멘토와의 연계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 SCORE(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미국 전역의 1만3천여 명의 창업가와 경영주로 구성된 자원봉사 네트워크
-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혁신 포털: 에너지 혁신 포털을 통해 연구성과물을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예비 및 초기 창업가 또는 협력을 통한 기술융합으로 혁신적 창출을 원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

- 캘리포니아 혁신 허브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에 관한 주지사 사무실(GO-BIZ)’을 설립. 사업성을 가진 아이디어와 스타트업 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연계 플랫폼으로 연구소, 대학에서 개발된 아이디어가 새로운 스타트업의 창조 또는 기존 제품 강화를 위해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목적
- 다양한 형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 근본 구축을 위한 창업 교육 실시
 - 대학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 STEM교육 / K-12(유치원-고등학교)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 K-12 모든 과정에서 각 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기업가 초청 강의, 프로젝트 참여 교육, 기업방문, 기업가정신에 대한 토론, 지역사회 비즈니스지도 제작, 1일 사업 실행 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창업 교육 실시
 - 다양한 기관을 통한 STEM 교육: EntreEd, The Brain Hamilton Foundation, Cisco, NASA, Teaching Entrepreneurship, MS, VentureLab, familySTEM, Tinkergarten, Texas Instruments, TED-ed, Lemonade Day, NSF, Roblox Education 등의 기관에서 교육 제공
 - 대학 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전공 및 과정 / 창업지원센터 / 창업자금지원 등

➤ 뉴욕주의 창업 지원 정책

- Startup New York 프로그램
 - 세제기반 혜택과 혁신적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뉴욕주에서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 뉴욕주 내의 면세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역 내의 사립대학에 속해 있는 뉴욕주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승인된 기업들에게 10년간의 세제혜택을 제공
 - 비즈니스 세금혜택으로는 메트로폴리탄 출근 교통세 면제(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MCTMT), 조직 및 기관세와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 유지세 면제, 부동산 이전세 면제, 판매세에 대한 크레딧 또는 환급, 기업 및 소득세 면제, 전기통신 서비스세에 대한 크레딧 등 제공

- Silcon Alley

- 뉴욕시 실리콘밸리를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 뉴욕시 정부의 리더십으로 총 기업 규모 710억 달러의 글로벌 2위 스타트업 허브 조성. 현재는 약 12,000여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곳으로 성장
- 2011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하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함
-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스타트업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스타트업 법인세 인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신설
- 이후 2014년부터는 (모험자본-성장) 5,000만 달러 벤처펀드를 조성해 도시 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모험자본-창업)1,000만 달러 규모의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

- 매사추세츠주의 창업 지원 정책

- 매사추세츠주, 생명과학 산업 진흥법(Chapter 130 of the Acts of 2008)

- 데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생명과학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포괄적 지원을 계획. 이를 통해 연구비용 지원, (모험자본-창업)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자금 지원, 세금 인센티브 지원, 장비 및 용품 지원, 고등교육 자금 지원 등 실시
- 매사추세츠 생명과학 센터(MLSC)를 통해 총 5억 달러 예산 중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주 경제에 기여한 기업에게 총 2.5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 지원하며, 나머지 2.5억 달러는 MLSC가 자유재량에 따라 (모험기업-성장)지역 내 생명과학 기업의 연구, 기업대출 및 투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 (모험기업-성장)18년 6월에 한차례 연장되었으며,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향후 5년간 6.2억 달러를 생명과학 산업에 투자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인재육성, 연구지원 등에 4.7억 달러, 세금 인센티브 제공에 1.5억 달러 지원 예정

➤ 민간,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

- 민간, SUAP 조직(2011): Startup America Initiative 정책하에서, 고성장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최고 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 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으로 구성된 비영리재단(SUAP,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조직하여 기업가 정신 교육, 기초연구 상용화, 창업 등을 지원
- 민간, 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인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Start Up Summer”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 Seedlings재단과 Kauffman재단이 자금을 지원
- 민간, TechStars: 전국 15개에서 운영되는 지역 조직을 통해 경험있는 5,000명의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향후 3년간 6,000개의 유망한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며 멘토로서 역할을 하도록 추진 ※ 2015년까지 25,000개 일자리 창출 및 성공률은 10배 가량 높일 것을 목표로 추진
- 민간, 블랙스톤 론치패드(Blackstone LaunchPad): 설립 초창기부터 기업가정신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여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기업가 양성 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엑셀러레이터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과 관련 전문가와의 매칭을 주선
- 산호세 주립대학의 실리콘 밸리 이노베이션 챌린지
 - 예비 기업가를 지원하여 기업가를 만들고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발전시키는 연례 포럼의 형태로 진행되며, 포럼은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됨
 - 학생들은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심사위원, 교수, 산업계 전문가들과 연계되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네트워크를 구축
- 창업에의 높은 인식 수준과 활발한 창업 활동
 - 창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우수하여 일반 대중의 창업에 대한 이질감이 거의 없으며, 창업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높음.
 - 실패두려움 29%, 위험추구 성향 5.7점, 창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

7.04점으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함

- 기업가정신 점수는 71.4점, 기회/역량인식은 각각 66.9점, 58.5점으로 모두 1위를 기록
- 창업기업(창업 1년미만) 수는 '20년 기준 804,398개로 '10년 56만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창업률(기업/인구)은 7.8%, 생계형 대비 기회형 창업배율이 6.83배(1위)를 기록
- 창업에 우호적인 노동시장
- 인력숙련도 75.8점, 노동시장 유연성 75.9점으로 각각 모두 세계 1위를 기록
- 디지털기술 활용, 다양한 배경 및 수준의 우수인재 풀 구축 등으로 인력의 양과 질 우수. 또한, 노동 및 고용계약의 유연성, 풍부한 고용기회 및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의 인재채용 용이

2) 성장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창업기업지원(SBA 지원제도)
- 각 주정부, 지역사회에 공동구매 대표자들을 두어, 창업자들의 공동구매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
- Women-Owned Small Business Federal Contracting Program: 매해 모든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중 적어도 5%에 해당하는 것을 여성 소유 기업을 선정
-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Program: 매해 모든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중 적어도 3%는 상이 퇴역군인이 소유한 기업을 선정
- 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매해 모든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중 적어도 5%는 영세기업을 선정
- All Small Mentor-Protege Program: 모든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이 많은 멘토로부터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울 수 있도록 매치
- HUB Zone Program: 매해 모든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중 적어도 3%는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HUB Zone이 확인된 기업 선정

- Natural Resource Sales Assistant Program: 정부는 대량의 자연자원과 잉여자산을 판매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중소기업에도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도움
- JOBS 법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제정 (2012)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회계 규정 완화
 - 비상장 시 최대 주주수를 5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확대, 신생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규정 적용 유예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 특정중소기업 투자펀드 모집광고 허용, 투자은행 상장 주선기업에 대한 리포트 발행 허용
- Scaleup America Initiative (2014)
 - 2014년 7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해 발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확대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 전역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8개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연평균 매출 15만 ~ 50만 달러 중소기업을 대상
 - 주요목표는 각 지역의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각 기업이 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지원 활동
 - 성장 지향형 기업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검증된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
 - 시장 분석, 경영 전략 수립, 마케팅 등에 대해 1대1 지원, 멘토링, 기술 보조 수행
 - 대출, 투자자와의 매칭, 엔젤 및 벤처 투자 유치 등 자본 접근성 확대
 - 지역 CEO, 생산자, 공급자,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세계 최다의 유니콘 기업 수: '21년 기준 미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전체 848개 중 393개로 46.34%를 차지함

- 세계 1위 수준의 R&D투자 및 기술개발
 - 미국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R&D 투자액의 28%를 차지
 - 2017년 미국의 R&D 투자금액은 5,432억 달러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킴. 2020년 회계연도 미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1,341억 달러 규모임
 - 인구 백만명 당 특허 수 144건, GDP대비 R&D투자 2.7%, 4차 산업혁명 PCT 특허 37,343건으로 높은수준을 기록

3) 회수

- JOBS 법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제정 (2012)
- IPO절차 간소화: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를 신생기업들에 한해 대폭 간소화

4) 재투자

- 높은 수준의 재창업 및 연쇄창업 비중: 창업실패 두려움이 낮으며, 성공창업가의 역할모형이 작동하여, 재창업 및 연쇄창업 비중이 17.55%로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함

나. 모험자본

1) 창업

- 중소기업청(SBA), 임팩트투자펀드와 초기단계혁신펀드를 조성(2011):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향후 5년간 각 펀드에 10억 달러씩 배정을 목표
 - 임팩트투자펀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스타트업 포함)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금을 지원(2:1 매칭)
 - 초기단계혁신펀드: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1:1 매칭)
-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신생 시장 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

개정(2011): 저소득 지역에 기반을 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 간소화. 저소득지역에서의 사적투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을 50억 달러까지 제공

- 스타트업 투자에 따라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이득세 영구 감면
- 엔젤투자 및 엑셀러레이터의 네트워크 보강
- 최근 VC의 주요 투자 대상이 시드 단계에서 확장 및 후기 단계 기업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초기 투자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
- 엔젤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대형 투자를 추진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개별 투자자 간의 준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75개 엔젤투자자들이 협회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집단 대형 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있는데, Y-Combinator, AngelPad, StartX 등의 엑셀러레이터가 대표적인 사례임
-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기회, 공동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피칭 이벤트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
- 자생적 창업 지원 생태계가 매우 발달되어 있음
-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인프라, 지원조직 등의 창업지원 환경이 모두 우수하여 창업활동에 있어 성공률과 성장가능성이 높음
- 엔젤투자 시장의 자금 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하며, 엑셀러레이터 666개(1위), 인큐베이터 1,400여개, 코워킹스페이스 3,762개(1위)로 매우 높은 수준의 창업 지원 환경 조성
- 샌프란시스코 뿐 아니라 뉴욕, 보스턴, LA, 시애틀 등 다수의 우수한 창업 허브도시 형성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2020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

2) 성장

- JOBS 법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제정 (2012)

-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 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해 고용 확대를 꾀한다는 취지로 제정
 - 소액 투자자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드에 초점
 - 기업은 개인 투자자로부터 연간 1백만 달러까지 모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 혹은 순가치가 10만 달러 이하인 투자자는 연간 소득의 5% 또는 2천 달러까지 최대한도 투자. 연간 소득 혹은 순가치가 1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는 연간 소득의 10%까지 투자

-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2015)
 - 2010년의 중소기업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으로 수립되었으며, 150억 달러의 금액을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에 지원
- 미국의 글로벌 IT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 미국 5대 IT기업(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은 '12~'16년 동안 스타트업 420개 회사에 투자
 - 특히, 구글은 스타트업 333개 회사(총투자회사 420개 중 79.3%)에 투자하였으며, '13년 우버에 2.6억달러를 투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만드는 등 유니콘 기업 22개 육성
 - 인텔의 경우 인텔캐피탈을 통해 '19.4월 스타트업에 1.2억달러 신규투자를 하는 등 매년 스타트업에 투자해오고 있으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를 멘토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
- 높은 비중의 후기 VC투자 / 민간 주도 벤처투자 환경 성숙 / 발달된 벤처투자시장
 - 벤처캐피탈 기반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환경이 성숙되어 있으며, 타 국가 대비 후기 단계 대형 벤처 투자 비중 높음
 - 전체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는 1,381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1위를 차지

3) 회수

- 높은 M&A를 통한 회수 비중: 전체 회수시장 규모인 2,574억 달러 규모에서 M&A를 통한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매우 높은 수준

4) 재투자

- 페이팔 마피아 등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성공한 창업자의 역할 모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회수한 창업자가 엔젤투자, 새로운 창업 등으로 벤처기업 생태계에 머무름

2. 중국

□ 중국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3-2>과 같음

○ 중국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3-2> 중국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 기업	모험 자본
창업	-중창공간(众创空间) 정책(2015~) -다중합일(多證合一) 제도 -기타 창업에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 및 철폐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및 신용체계 건설 정책 -해외 우수 인재 유치제도 개선 -각 지방정부 별 다양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실시 <민간> -창업에의 높은 인식 수준과 활발한 창업 활동 / 독보적 1위 수준의 활동기업 수 대비 창업률 및 창업기업 수 -주요 도시를 위주로 혁신생태계의 집결현상이 나타남(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된 창업생태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및 해당 시장에서의 창업 활발 -낮은 수준의 고부가가치산업에서의 창업 비율	-‘정부투자자금관리의 재정출자 효율성 강화에 대한 통지’: 정부 창업유도 펀드 운용 합리화(2020) -각 지방정부 별 다양한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조성 <민간> -발달한 초기 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시장(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 실시
성장	-국가고신구별 가젤기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 <민간> -세계 2위의 유니콘 기업 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기간이 매우 짧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특히 수 기준)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 조성(400억 위안 규모) -개인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의 70%에 대하여 세금 공제 -국가고신구별 가젤기업 스케일업 목적 펀드 조성 -국가고신구별 가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장려금 지급 등 <민간> -발달한 벤처투자시장(벤처캐피탈규모 세계 2위) -월등한 수준의 P2P,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체금융 시장 (세계 1위)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CVC 투자 활발,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

		-과도한 수준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심의 창업 생태계(중국 전체 벤처투자의 42%, 미국의 FANG은 5%)
회수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조성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IPO 심사 가속화 -해외 기업에 대한 IPO시장 진입 문턱 완화 <민간> -Exit 방식이 뚜렷이 개선, IPO에 의한 Exit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	<민간> -엑싯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매우 짧음
재투자 (재도전)		<민간> -엑싯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매우 짧아 창업 투자 활성화 및 선순환 형성

가. 모험기업

1) 창업

➤ 중창공간(众创空间) 정책

● 기본 정책 내용

- 중창공간은 창업을 지원하는 중국형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개인 창업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혁신과 창업, 인큐베이터와 투자를 결합한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플랫폼
- 사무공간을 비롯해 혁신기술 서비스, 자금 지원,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등을 제공
-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됨.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부처에서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중창공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으며, 선두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중창공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스타트업의 초기투자 단계부터 회수(Exit)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오늘날 중국의 혁신 창업 생태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17년 중창공간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17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5,739개의 중창공간이 설립되었으며, 105만개의 개방형 창업공간을 마련해 매년 41만개의 창업 팀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제공 중
- 지역별로는 광둥성에 692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광둥성에 이어 장수성

588개, 산동성 454개, 허베이성 358개를 기록

- ‘중국 중창공간 백서 2018’에 따르면, 중창공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로는 기업 서비스, 인터넷+,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스마트 H/W, 공유경제 등 혁신기술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해양, 철도, 항공, 자동차 등 세분화 및 전문화 된 분야까지 포함

- 관련 세부 정책

- 과기부, 중창공간 발전작업 지도 (2015.09): 중창공간 정의와 방향, 설립조건, 서비스 기능 등 규범화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2016.08): 조건에 맞는 중창공간에 대한 세수혜택 제공
-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세무총국, 소형·영세기업 창업혁신기지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2016.12): 중소기업쌍창기지(小微企业双创基地: 창업기지, 창업원, 중창공간, 인큐베이터,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구, 대학 과기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혁신장소와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토지, 자금, 금융, 세수 등 정책적 지원 제공
- 과기부, 국가급 중창공간 임시 관리방법 (2017.10): 중창공간에 대한 규범화와 표준 제정 및 국가급 중창공간의 조건 및 표준 마련

-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

- 창업에 필요한 증서를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통합하여 창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개선
- 2014년 창업에 필요한 3개 증서(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코드, 세무등기증)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추가로 사회보험, 통계등기증도 통합하는 오증합일(五證合一) 제도를, 2017.4월에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실시

- 기타 창업에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 및 철폐

- '15년 국무원은 117개 행정심사허가권을 하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
-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한 비(非)행정 허가 심사 전면 취소 등

-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및 신용체계 건설 정책
 - 지식재산권 보호제, 징벌적 배상제도 실시
 - 지식재산권 관련 공공서비스 및 플랫폼 구축
 - 독점행위 개혁 실시, 반독점법 집행 강화
 - 산업 네거티브리스트 시행을 통해 다양한 창업 유도
- 해외 우수 인재 유치제도 개선
 - 해외 우수 인력의 귀국 후 창업 편의성 제고, 외국인 영구거주, 기술이민제도 수립 등
 - 자국 해외 유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사무공간 제공, 호적 등록 지원, 자녀입학 특혜 등의 조치를 시행
 - 2016년말 기준 국내 대졸자의 창업비율은 3.0%인데 반해 해외 유학생의 귀국후 창업비율은 7.9% 수준
- 각 지방정부 별 다양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실시 / 펀드 조성
 - 베이징시: 혁신인재 100만위안 장려금 지원, 유학생 스타트업 10만위안 지원, 창업 투자금액 10% 보조, 대출이자 40% 지원, 하이테크기업 소득세 감면, (모험자본-창업)5,000만위안 기금 조성
 - 상하이시: 10만명 창업교육 실시, 3만명 창업 지원, 해외우수인재 기술이민, 3년간 매년 2,800위안/인 임대료 보조, 20만~200만위안 창업담보대출, 80개 인큐베이팅 시범기지 구축
 - 선전시: 3년간 매월 500위안 임대료 보조, 우수창업프로젝트 5~20만위안 지원, 20만위안 창업담보대출, 창업장비 구입비 최고 300만위안 지원, (모험자본-창업)200억위안 혁신창업기금 조성
 - 청두시: 20만명의 과학기술 창업자 육성, 매년 5억위안 인재전문기금 조성, 최장 3년간 40위안/㎡ 월 임대료 지원, 10~100만위안 창업자금 지원, 400개 인큐베이터 건립, (모험자본-창업)2,000억위안 목표로 엔젤투자 및 창업투자펀드 100개 설립 등
 - 광둥성: 창업에 성공한 대학생에게 5천만위안의 창업자금 지원, 우수 프로젝트

선정, 5~20만원의 창업자금 지원

- 원난성: 매년 100개 대학생 창업 프로젝트 선정해 3~5만원의 자금 지원, 온라인매장 운영시 소액의 담보대출 및 이자혜택
- 주요 도시를 위주로 혁신생태계의 집결현상이 나타남
 - 1급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항저우 등
 - 유니콘 기업의 경우 베이징, 선전, 상하이, 항저우 4개 지역에서 162개 기업을 보유하며 이는 총 유니콘 기업 수의 80%를 차지
 - 선진 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모여 중국 기술 축적과 자원 축적의 중심이 되고, 이들이 혁신창업기업을 육성
 - 가령, 2018년 텐센트계 창업기업이 1,300여개를 넘었고, 텐센트가 위치한 선전이 베이징, 상하이에 훨씬 앞선 전체 창업기업의 32%를 차지
 - 2018년 베이징 인구 1만 명당 111건의 특허를 보유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9년 1분기 까지 베이징은 유니콘 기업 82개를 보유
-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된 창업생태계
 - 2020년 7월 현재 중국의 신경제 분야 창업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10개 대학은 모두 8,100명이 넘는 창업자를 배출했으며, 이는 신경제분야 창업자 20명 중 1명이 이들 대학 졸업생
 - 베이징대, 칭화대, 교통대, 푸단대 등 '베이징자오푸'라고 불리는 4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창업이 활발함
 - 2014년 이래 '만인창업, 만중창신'을 내걸고 각 대학에서도 창업센터를 운영
 - 유명 대학은 동문 기금 외에도 펀드를 설립해 운영하고, 이 펀드의 LP는 동문들이 기부하기도함. 투자방향도 동문 위주
 - 동문들이 마음이 맞아 같이 창업해 성공하는 사례가 많으며, 텐센트, 오포, 샤오핑자동차 등이 모두 동문 창업 사례임. 또한, 엔젤투자의 경우 대부분 지인에 투자하며 동문이 대표적임
- 창업에의 높은 인식 수준과 활발한 창업 활동 / 독보적 1위 수준의 활동기업 수

대비 창업률 및 창업기업 수

- 전 연령층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창업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 있어 창업활동의 대중성이 높음
- 실패두려움 37%, 위험추구 성향 4.5점, 창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 5.9점(2위)으로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기업가정신 점수는 71.1점(2위), 창업률(활동기업 수 대비, 인구수 대비) 19.6%(1위), 1.53%(2위)로 미국에 이어 전반적인 점수가 매우 높은 수준. 특히 활동기업 수 대비 창업률은 미국의 7.8%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
- 신설기업수는 '17년 1-9월 기준 451만개로 '12년 약 200만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및 해당 시장에서의 창업 활발
- 중국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창업활동이 증대
- 2016년중 중국의 인터넷쇼핑 구매자수는 4.7억명, 침투율(인터넷 사용자 중 연간 1회 이상 온라인쇼핑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의 비중)은 63.9%에 달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의 39.2%를 차지
- 특히 중국의 2017년 연간 모바일 결제액은 1,209억달러로 미국의 1.7배 수준으로 예상
-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창업 또한 매우 활발함: 중국의 창업기업중 상당부분(69.7%)이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도·소매 분야에 진출
- 낮은 수준의 고부가가치산업에서의 창업 비율
- 신설기업이 고객센터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유행에 따른 유사분야의 창업이 급증
- 도·소매 등 고객센터 서비스 분야의 창업이 전체의 69.7%로 높은 반면 정보통신, 금융, 전문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의 창업은 8.2%에 불과(고부가가치산업 분야 창업 비중 : 영국 35.5%, 미국 32.8%, 프랑스 31.4%, 독일 26.9%)

2) 성장

- 국가고신구별 스케일업 지원 정책 및 펀드 조성
 - 가젤기업의 57.37%(1,639개)는 10개의 국가고신구에 위치하며, 중국의 가젤기업 지원·육성 정책은 국가고신구 단위로 실시(가젤기업: 연 매출이 1,000만 위안(약 16억) 이상이며, 매년 2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
 - 중관촌은 국가고신구 가젤기업 수의 23.14%에 해당하는 66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 장장 296개(10.36%), 선전 123개(4.31%)로 상위 3개 국가고신구에 38%의 가젤기업이 분포
 - 국가고신구별 가젤기업 지원·육성 정책은 대출 우대·완화, 보조금 지급 등 금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
 - 중관촌: 5성 등급제에 따라 이자보조금 차등 지원, 매년 계약을 이행할 때마다 등급이 올라가며(별 추가), 이자 보조금 비율도 5%씩 증가(최대 40%)
 - 선전: 준유니콘·잠재유니콘 기업 육성에 집중하며, (모험자본-성장)선전시 유니콘기업 육성 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지원
 - 광저우: 가젤기업 인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인증을 통과한 가젤기업에 5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2년 연속 가젤기업 인증기업은 10만 위안, 3년 연속 가젤기업 인증기업은 2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 인증 가젤기업 중 잠재유니콘기업이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각각 50만 위안과 10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 쑤저우: 신규 가젤기업에 최대 50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 / 정부조달,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인재 추천, 토지·건물 양도 등에 우선권 부여
 - 항저우: 연수익 2,000만 위안 이상을 달성한 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을 대상으로 2~5만 위안의 장려금(보조금) 지급 / 신용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정부조달, 프로젝트 선정, 투자 유치, 토지 사용, 인재 추천 등에 우선권 부여 / (모험자본-성장)소기업과 마이크로기업에 융자담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관련 세금 면제, 리스크 보상, 장려금 제공

- 세계 2위의 유니콘 기업 수: '21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전체 848개 중 143개로 16.86%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데카콘 기업 수도 미국에 이어 2위이긴 하지만,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기록함
-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기간이 매우 짧음: 2019년 후룬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창업기업이 유니콘 성장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4년으로 미국(7년)에 비해 절반 수준
-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특히 수 기준)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PCT 특허 수 41,508개(1위), 세부 지표 중 시청각 기술, 컴퓨터 기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반도체의 4개 분야 1위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역량은 특허 기준 2019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 수준
 -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상당수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3) 회수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조성
 - 베이징 과학기술단지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13년 전국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자금조달 용이
 - '13년 시가총액 90억 달러, 등록기업수 356개에 불과했었지만, '17년 시가총액과 등록기업수가 각각 1조 1,630억 달러, 7,410개로 최고치를 기록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IPO 심사 가속화: '16년 말부터 IPO심사 속도를 가속화함
- 해외 기업에 대한 IPO시장 진입 문턱 완화
 - 중국의 경우 IPO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상하이와 심천 증시와 연결된 홍콩 시장이 글로벌화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음
 - 기술창업회사에 대해 중국 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개방의 문을 열고 있음
- Exit 방식이 뚜렷이 개선, IPO에 의한 Exit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
 - 2017년 중국 및 외국 VC의 Exit 건수는 1,420건으로 주요 Exit 방법으로는 IPO Exit가 470건으로, 33%, 지분매각 Exit는 360건으로 25%를 기록. 신삼판(新三板)

Exit의 경우 315건을 기록하면서 22% 수준 기록

나. 모험자본

1) 창업

- 정부 창업유도 펀드 운용 합리화
 - ‘정부투자기금관리의 재정출자 효율성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2020.2.21.): 정책기금 중복문제 해결, 자금의 파편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 재정출자의 규제 강화, 정부투자기관 효율성 제고, 정부 투자기준 전 과정의 성과관리 실시, 정부 투자기관의 엑시트(EXIT)체계 마련
 - ‘20년 6월 기준 중국내 창업유도 펀드는 총 1,349개, 규모는 21,452억 위안에 달하며 2016년 최대치를 보이다 줄어드는 추세.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기보다는 무분별한 투자에서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로 변화하는 방향임
 - 이로 인해, 투자 안정성이 증시됨에 따라 2017년중 성장기 및 성숙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건수 기준 59.8%, 금액 기준 85.2%를 각각 차지해, 2016년 투자건수 51.9%, 투자 금액 75.1%에 비해 증가함
 - 정부의 출자 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신청 시 이미 투자할 자금이 있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함. 투자 범위와 투자 방식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해외투자도 가능하게 함
 - 정부 정책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는 목적성과 이윤을 따지는 LP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 발달한 초기 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시장
 - 미국의 엔젤투자 28억 달러 규모에 이어 22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 기록
 - 인큐베이터 수가 4,849개로 미국의 1,400여개를 훨씬 앞지르며 세계 1위 수준 기록
-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멘토링 등 실시
 - 바이오그룹 액셀러레이터 we so cool: 2016년 10월 창립된 이래, 기술과

산업자원을 바탕으로 신재료, 스마트 제조, 스마트 하드웨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영역에서 투자하며 30~40여개의 기업을 액셀러레이팅 했으며, 그 중 30% 이상에 투자

- 하이얼 그룹 하이창후이: 2014년 5월에 만들어졌으며 하이얼그룹 상품에 필요한 기업들을 기르는 창업 플랫폼. 11개 도시와 해외 9개 국가 28에 액셀러레이터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TMT(Technology, Media, Telecom), 인터넷, 바이오 등 영역이 주요 영역. 현재 3,000여개 기업을 입주시켰으며 300여개 기업을 액셀러레이팅함. 그 중 6개가 가젤기업(고성장기업), 2개가 유니콘 기업
- 텐센트 창업공간: 2015년 이노엔젤펀드, 텐센트, 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텐센트는 생태계 지원, 이노엔젤펀드는 평가와 투자를 담당. 27개 도시 34개 창업 공간을 운영 중이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면서 시장을 개척해주고, 해당 업계에서의 어느 정도 위치를 만들어줌
- 원싸이 공간: 쉬지아후이정부, 상하이이디엔그룹(上海仪电集团),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3사가 만들어 2017년 1월 정식으로 운영.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관련된 창업기업들을 성장시켰으며, 현재 5기까지 109개 기업이 있으며 입주기업의 총 가치는 190억 위안, 입주 전후 성장률은 284%에 달함

2) 성장

- 400억위안 규모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 조성
- 개인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의 70%에 대하여 세금 공제: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목적
- 발달한 벤처투자시장(벤처캐피탈규모 세계 2위)
- VC투자 규모 243억 달러로 벤처투자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격차 감소(미국의 경우 1,381억 달러)하며 2위 기록
- 월등한 수준의 P2P,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체금융 시장 (세계 1위)
- P2P,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체금융 시장의 규모가 2,154억 달러로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커 세계 1위를 기록(미국의 경우 611억 달러)

-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CVC 투자 활발,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
 - 중국 주요 IT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중심으로 직접투자 활발
 - '16년 기준 중국 벤처캐피털 투자 가운데 BAT의 투자가 전체의 42% 비중 차지
 - 중국의 상위 50개 스타트업 기업 중 BAT와 관련된 기업이 50%(BAT의 직접투자 30%, BAT소속 스타트업 6%, BAT출신 설립 14%) 차지
 - Tencent의 경우 750개회사 투자('18년기준), Alibaba의 경우 350개회사 투자('17년기준)
- 과도한 수준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심의 창업 생태계
 -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 막대한 자금력과 사용자를 바탕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
 - 미국의 4개 IT 선도기업을 통칭하는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은 미국 벤처투자의 5%를 차지하는 데 비해 BAT는 중국 벤처투자의 42%를 담당
 - BAT는 동종 분야의 다수 기업에 동시 투자한 후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투자를 철회하거나 일부 기업을 자회사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

3) 회수

- 엑싯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매우 짧음
 - 벤처투자자가 초기 투자 이후 회수(IPO, M&A 등)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한국은 12년, 미국은 7년인데 반해 중국은 4년으로 짧아 빠른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운 창업투자의 주요 유인으로 작용하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영국

□ 영국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3-3>과 같음

○ 영국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3-3> 영국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 기업	모험 자본
창업	-TechNation설립(2011) 및 이를 중심으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실시 -테크네이션, Rising Stars 프로그램 운영 -학내 기업설립 활성화 정책(Startup Britain Initiative) (2011) -초기기업투자법(SEIS) 제정 (2012) -다양한 혁신가/창업가 특화 비자 프로그램 운영 -낮은 수준의 창업 규제 및 창업 법적 비용 -BBB, Startup Loan 프로그램 <민간> -세계 1위 수준의 이민자/외국인 창업 비중 -유럽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인프라(세계 2위) -창업에 우호적인 노동시장 -스타트업계와 영국 정부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정책소통(SOS 캠페인)	<민간> -글로벌 창업자본의 허브 역할(런던 테크시티)
성장	-경제 정책에서 '스케일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채택 -테크네이션, Upscale 프로그램 운영 (2016) -테크네이션, Future Fifty 프로그램 운영 (2014) -기업혁신부(BIS),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정책 발표 및 시행 (2013) -기업혁신부(BIS), 기업전용은행(BBB) 출범 및 기업 대출 지원 (2014) -BBB, 다양한 스케일업 대출/보증 프로그램 제공 -세계 최초 스케일업 기업 지원 전담 기관 'Scale Up Institute' 설립(2014), 각종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특허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시행 <민간>	-런던 테크시티 조성 (2010) -Business Growth Fund 조성 (2011) -BBB, 스케일업 펀드 <민간> -민간 중심의 벤처 자금 및 지원생태계 조성 -발달한 벤처투자시장(벤처투자시장 규모 상위권) -최근 성장단계에 대한 투자 급증세 -런던 등의 메가시티에 집중된 벤처투자

	-세계 3위 수준의 스케일업 및 유니콘 기업 보유	
회수		<민간> -높은 수준의 M&A를 통한 회수 비중(34%) -활발하고 빈번한 엑시트(런던 세계 3위)
재투자 (재도전)		

가. 모험기업

1) 창업

- TechNation설립(2011) 및 이를 중심으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실시
 - TCIO(현 TechNation) 설립 (2011): TCIO는 2011년, 정부의 런던 테크시티 지원 정책(2010)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테크시티 관리를 위한 기관이었음. 이후 '14년 TechCity UK로 명칭을 바꾸었음
 - 이후 '18년, 지역별 창업정책 지원기관 Techcity UK와 TechNorth를 통합해, TechNation 설립.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유망 기술 분야별 지원 핵심 기관
- 테크네이션, Rising Stars 프로그램 운영
 - 초기단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원대상은 혁신적, 창의적 기술사업 영위 초기 창업기업 (업력 1~3년), 시드에서 Pre시리즈A 투자유치 또는 매출액 150만파운드 미만 기업
 - 최대 4천 파운드(한화 595만 원)의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피칭 교육 및 투자기관 대상 IR피칭 기회 제공, 투자자 매칭, 테크네이션 통해 홍보 및 동문회 네트워킹 지원
- 학내 기업설립 활성화 정책(Startup Britain Initiative) (2011)
 - 2011년 스타트업 브리튼 계획(Startup Britain Initiative)을 통해 대학교가 자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대학 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 초기기업투자법(SEIS) 제정 (2012): 초기 성장기업 지원 위한 '초기기업투자법(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도입해 연간 10만 파운드 한도 내 소득세 50% 감면

- 낮은 수준의 창업 규제 및 창업 법적 비용
 - 창업 과정에서의 규제 수준이 매우 낮은 편으로, 특히 창업 과정에서의 법적 비용이 거의 없음
 - 사업시작 규제 수준 94.59점(2위), 사업시작 관련 비용 0%(1위)
- 다양한 혁신창업가 비자 프로그램 운영
 - 혁신가/창업가 특화 비자 프로그램 운영(Innovator Visa)등 적극적인 창업인재 유치 정책으로 이민자 및 외국인 창업활동 활성화
 - '19년 3월부터 기존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와 'Tier 1 Entrepreneur Visa'를 폐지하고, Tier1 Global Talent 비자, 혁신가 비자(Innovator Visa)와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를 신규 도입
 - Tier1 Global Talent 비자는 과학, 인문, 공학, 의학, 디지털 기술 및 예술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 또는 '유망한 리더'로 승인(Endorsement)받은 경우 지원 가능. 취득 후 혜택은 5년 4개월간 영국에 거주 가능(추가 5년 갱신 가능),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거나 본인 소유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의 디렉터로 일할 수 있음
 - 혁신가 비자는 영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비자로, 5만 파운드의 투자금과 보증기관의 사업 승인이 필요함. 스타트업 비자는 영국에서 창업 시 필요한 비자로 보증기관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심사 후 승인함
 - 창업비자 프로그램 수준이 65점으로 미국과 독일 45점, 일본 15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 65점과 1위 기록
- Startup Loan 제도 실시
 - 초기 스타트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2만 5천파운드(평균 7,200파운드)를 대출기간 1~5년, 이자 연 6%로 대출
 - 12개월 간 무료 멘토링도 지원
- 높은 수준의 이민자/외국인 창업 비중
 - 외국인/이민자 창업비중이 20.1%로, 미국(14.2%), 독일(18.3%), 프랑스(12.5%)에 비해서도 독보적 1위 수준을 보임

- 유럽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 인프라(세계 2위)
 - 창업 지원조직 양적/질적 수준 7.17점(2위)/13.91점(2위), 코워킹스페이스 1,044개(2위)
 - 이 외에도 '13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엑셀러레이터(50개)를 보유 중. 이후 더욱 증가하여 '21년 기준 엑셀러레이터 159개, 인큐베이터 206여개가 활동 중
 - 런던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인프라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평가
- 창업에 우호적인 노동시장
 - 인력숙련도 64.7점, 노동시장 유연성 69.5점으로 미국(75.8, 75.9점), 중국(59.4, 58.1점), 일본(62.3, 69.8점), 독일(69.3, 68.9점), 프랑스(60.1, 61.6점), 한국(62, 53.5점)에 비해 위 7개 국가 중 각각 3위 기록
- 스타트업계와 영국 정부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정책소통
 - 영국 스타트업 업계의 SOS(Save Our Startup) 대정부 캠페인
 -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영국 스타트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자, 영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서명운동, 공식 서한 발송
 - 서한에서 1) 위기의 스타트업을 위해 지분 매입을 포함한 긴급 자금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마련할 것, 2) 이노베이트UK 보조금이나 R&D 세제 혜택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신속 자금 지원(fast track payment)을 시행할 것, 3)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초기기업투자제도(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 벤처캐피털트러스트(Venture Capital Trust•VCT) 등 기존의 기업 투자 지원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
 - 이에 정부는 사태 종식 후, 일정 시점 융자 상환 또는 대출을 정부지분으로 전환하는 전환사채 매입 (Conveirtible Loan)과 혁신 지원 프로그램 'Innovate UK'의 스타트업 대상 보조금 지급, R&D 세제 혜택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 영국 창업생태계 참여자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음(예: 런던 창업생태계(Cluster of Startup Communities))
- 런던이 유럽 테크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커뮤니티의 힘이 컸음
- 다양한 나라와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어우러진 커뮤니티와 다양한 MeetUp 그룹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빠른 정보 교환, 비즈니스 파트너의 발굴을 쉽게 할 수 있음

2) 성장

- 테크네이션, Upscale 프로그램 운영 (2016)
 - 중기단계의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원대상은 월간 성장률이 10% 이상인 고속성장기업으로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거나, 50만 유로(한화 6.7억 원)의 수익이 있는 본사가 런던에 소재한 중기 스타트업
 - 매년 30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6개월간 30여명의 스케일 전문 글로벌 전문가에게 코칭 받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테크네이션, Future Fifty 프로그램 운영 (2014)
 - 후기단계의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영국 소재 스타트업 중 최근 2년간 50% 이상의 매출 증가, 시리즈B 투자 유치 또는 최근 12개월 동안 500만 파운드(한화 74.4억 원) 이상 수익 달성한 기업을 대상
 - 매년 50개의 성장 유망기업을 선정해, 최대 2년 동안 종합적인 고성장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동문 네트워킹, 글로벌진출, 인재구인 등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참여 기회 부여
 - '19년까지 131개의 선정기업(평균 업력 7년)이 110억 USD 투자유치, 9개 기업 IPO, 33건의 M&A를 성사시킴
 - 스카이스캐너, 저스트잇, 주플라 등이 대표적인 Future Fifty 선정 기업
 - TechNation의 각 단계별 프로그램(Rising Stars - Upscale - Future Fifty)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기업들을 다음 단계 선정에 가산점 등을 부여

- 기업혁신부(BIS),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정책 발표 및 시행 (2013)
 - '13년부터 스케일업 지원을 강조하며 기업혁신부(BIS)가 캠페인을 주도
 - 기업혁신부(BIS)는 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정책 발표 및 시행 (2013)
- 기업혁신부(BIS), 기업전용은행(BBB, British Business Bank) (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소기업 부문 효율적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 '12.9월 설립이 선포되어 '13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4.11월 EU의 정부보조인가 및 법적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주회사체제로 자본금 10억 파운드 규모로 공식 출범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행위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및 건전성감독청(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의 감독에서 제외되며 규제자본 보유 의무도 없음
 - 주요 손자회사 중 BBB Patient Capital Limited의 경우 영국 정부의 Patient Capital Review에 따라 '17년 하반기 향후 10년간 혁신기업에 200억 파운드 지원 실행 계획으로 신설
 - BBB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단계별로 간접 지원하는 사업모델 보유
 -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실시하며, 지분투자 프로그램과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나뉨
 - (모험자본-성장)지분투자 프로그램: 스케일업 대상 엔젤코펀드(Angel Co-Fund), ECF(Enterprise Capital Funds), Venture Capital Catalyst Fund, UKIF(UK Innovation Investment Fund) 등이 있음
 - 대출보증 프로그램: (모험기업-창업)스타트업 대상 '스타트업 론(Startup Loan)' / (모험기업-성장)스케일업 대상 '성장지원(Help to Grow) 프로그램' / 선도유지 대상 기업금융 보증, ENABLE Guarantee, ENABLE Funding, 투자 프로그램 등 제공

- 세계 최초 스케일업 기업 지원 전담 기관 ‘Scale Up Institute’ 설립 (2014)
 - 영국 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고성장, 지속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국 정부, 기업가, 교육기관이 협력해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인재육성, 리더십, 시장접근성제고, 자금조달, 인프라구축 등의 영역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
 - Career and Enterprise Company(인재육성): 기업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300명의 CEO 자문단이 멘토링과 교육운영비를 지원
 - The Supper Club(리더십): ‘03년부터 창업자들간 상호 지원체제(Peer-to-peer networks)를 구축하고 경험, 지식, 지원을 공유하는 공동체. 연 800회의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기업가 리더십 고양
 - Sharing in Growth(시장접근성제고): 영국 항공업계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항공업계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20년까지 2억 5천만파운드 자금지원 및 1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 Amadeus Capita Partners(자금조달): ‘97년 설립해 150개 이상의 기업에 10억 USD 투자 실적을 보유
 - Google for Startups UK: London Campus(인프라구축): 미국 외 최초 설립된 구글의 해외 캠퍼스로 ‘12년 설립 이래 4,189개의 일자리 창출, 1억 9천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 유치 실적. 런던 기반 창업가들을 위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인프라 제공
- 특허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시행
 - 기업혁신의 결과가 영국 내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특허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세계 3위 수준의 스케일업 및 유니콘 기업 보유
 - 테크스케일업, 유니콘 기업 수 모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
 - 특히 핀테크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유니콘기업 비중이 높음

나. 모험자본

1) 창업

- 글로벌 창업자본의 허브 역할
 -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자본 유입 등 금융 시장의 높은 개방성 기반
 - 해외시장 진출 비중 18.9%, 무역/금융 세계화 73.2점/89.2점으로 미국(각 9.5%, 56.4/78점), 독일(각 18%, 78/81.3점), 프랑스(각 19.9%, 71.5/83.8점)에 비해서도 프랑스의 해외시장 진출 비중을 제외,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기록

2) 성장

- 런던 테크시티 조성 (2010)
 -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시기에 민간 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 VC 등)이 런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장
 - 이후, '10년 보수당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런던 북동부 창업생태계의 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테크시티(TechCity) 지원 계획 공표
 - 영국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큰 테크 스타트업 허브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이는 메가시티
 - '19년 기준, 미국과 아시아에서 영국 기술기업으로 투자된 금액은 49억 파운드 규모로 영국 전체 투자금액의 45%
- Business Growth Fund 조성 (2011)
 - 자본 확충을 스케일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Business Growth Fund'를 2011년에 설립
 - 기존 2010년대 초기 정책목표가 테크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테크시티의 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14년부터 고성장기업의 발굴, 집중 육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 Barclays, HSBC, Lloyds, RBS, Standard Chartered의 5개 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

- 정부, 투자자, 기업가, 민간기관, 교육기관 및 금융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스케일업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리더십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 민간 중심의 벤처 자금 및 지원생태계 조성
 - 벤처금융과 같은 창업기업 민간 자금조달 비중이 91.5%로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함. 이는 미국의 경우보다도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수준
 - 반면, 중소기업 대출 중 정부 대출보증 비율은 0.02%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연금 등에서의 간접투자만 활발
 - 정부의 정책금융보다는 민간 중심의 창업기업 투자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기업의 독자적 생존능력 향상
 -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 조직 활성화 및 생태계 육성을 통해 창업지원 생태계 허브로서의 역할
- 발달한 벤처투자시장(벤처투자시장 규모 상위권)
 - 벤처캐피탈 투자 32억달러, 대체금융 104억 달러로 미국(각 1,381, 611억 달러), 중국(각 243, 2,154억 달러), 일본(각 25, 11억 달러), 독일(각 21, 13억 달러), 프랑스(각 29, 9억 달러), 한국(각 39, 8억 달러)에 비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4위 수준을 기록
 - 특히 P2P, 크라우드펀딩 등 대체 금융의 규모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임
- 최근 성장단계에 대한 투자 급증세
 - 예비 또는 초기단계(Seed stage) 투자건수가 전년 대비 11% 감소하여 이 단계에 대한 투자패턴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반면, 성장단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8년 39억 파운드(한화 5.8조 원) 규모에서 2019년 76억 파운드(한화 11.3조 원) 규모로 급증하여, 다른 단계에 대한 투자보다 확연하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 런던 등의 메가시티에 집중된 벤처투자

- '19년 기준, 영국 전체 스타트업 투자 중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 투자한 비중이 투자건수 기준 전체의 48%, 투자금액 기준 전체의 73%를 차지

3) 회수

- 높은 수준의 M&A를 통한 회수 비중(34%, VC기준)
- 미국 37%에 뒤이어 M&A를 통한 회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
- 활발하고 빈번한 엑시트
- '13~'18년 6,917개사 엑시트 성공 (런던은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엑시트 기업 수에서 전 세계 3위)

4. 독일

□ 독일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3-4>과 같음

○ 독일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3-4> 독일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 기업	모험 자본
창업	-연방경제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창업 정책, 독일의 뛰어난 산업역량을 토대로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 지원 -높은 수준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독일 사회법 3권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I): 초기 창업단계 생계지원 규정 -독일 사회법 2권 (Zwei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 창업 보조금 및 대출, 컨설팅 지원 규정 -독일 재건은행(KfW)을 통한 다양한 창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ERP-일반창업대출, ERP-창업자금, ERP-창업자대출) -Guarantees provided by guarantee banks 보증 프로그램 -Gründerwettbewerb - Digitale Innovationen 프로그램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EXIST도입 (1998) -대학/중고등학생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2010) <민간> -프라운호퍼, 스피노프 지원 프로그램 (Spin-Off-Förderprogramme) -뛰어난 산업 인적자원을 토대로 높은 창업역량 보유 -높은 수준의 창업률(특히 기업수 대비) -신규 창업건수가 '0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뛰어난 사업적/법적 인프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독일 엑셀러레이터 (German Accelerator) 설립 (2012) -독일 재건은행, 첨단기술창업펀드(HTGF, High-Tech Gründerfonds) 설립 (2005) -German Micro-Mezzanine Fund -INVEST 프로그램 <민간> -엑셀러레이터 121개, 인큐베이터 56개, 코워킹스페이스 791개 운영
성장	-종합혁신프로그램(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또는 ZIM: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2008) <민간> -슈타인바이스(Steinbeis), 상용화기술 지원 프	-독일 재건은행, 벤처캐피탈 코퍼리온 (coparion) 설립 (2016) -독일 재건은행, KfW Capital 설립 (2018) -Deutsche Börse Venture Network -ERP/EIF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ERP/EIF venture capital fund of funds)

	로그램 -강력한 산업기술 경쟁력 -유럽 1위 수준의 R&D투자 -낮은 수준의 스케일업 기업 / 고성장기업 중심 -높은 해외시장 진출 및 무역 세계화 수준	<민간> -다소 낮은 수준의 벤처투자시장 규모
회수		<민간> -높은 수준의 M&A를 통한 회수비중(43%, PE 기준)
재투자 (재도전)	-독일 사회법 2권 (Zwei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 재기지원금(Einstiegsgeld)	

가. 모험기업

1) 창업

- 높은 수준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 창업생태계 내 정부 주도가 강한 편은 아니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가 높음
 -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준은 5.80점으로 세계 1위 수준
 -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EXIST), 공공 벤처캐피탈 투자(코페리온), 공공기술 이전(프라운호퍼) 등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질 및 신뢰도가 높음
- 독일 사회법 3권(Drit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I): 초기 창업단계 생계지원 규정
 - 사회법전 3권 제94조에 의하면 초기 6개월간은 기존의 실업급여에 월 300유로를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합당함을 상공회의소나 세무사에게서 검증받아야 함
- 독일 사회법 2권(Zwei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 창업 보조금 및 대출, 컨설팅 지원 규정
 - SGB II 제 16c조는 장기기초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설비구입비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최대 5,000유로이며, 그 이상은 대출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업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

- SGB II 제 16c조 2항에 의하면 창업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독일 재건은행(KfW)을 통한 다양한 창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
- EU운영위원회에서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ERP-Fund에 의해 설립된 독일 재건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
- ERP-일반창업대출: 자영업자 및 창업 5년 이하의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2020년 10월 기준으로 금리는 1-2.12%이며, 만기는 최대 10년, 최대 10만 유로이고, 지원대상은 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의 자영업 및 제조업의 창업 및 기업인수의 경우
- ERP-창업자금: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후순위 형태의 장기 대출. 지원 금리는 연 2.82%부터이며, 만기는 15년이고 거치 기간은 7년. 지원규모는 최대 50만 유로이며, 지원 금액의 15% 이상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해야 함(구동독지역 10%)
- ERP-창업자 대출: 창업단계에서 은행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및 창업 5년 이하의 기업에게 자기자본과 다름없는 장기자금을 지원. 지원조건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금리는 1.21%부터이며, 만기는 최대 10년. 지원규모는 최대 12.5만 유로이고, 자체자금은 필요 없음
- Guarantees provided by guarantee banks 보증 프로그램
- 신생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보증
- 보증은 최대 80%까지 융자 가능(최대 125만 유로)
- Gründerwettbewerb - Digitale Innovationen 프로그램
- 매년 두 차례 ICT기술 혁신 스타트업 여섯 군데 선정
- 지원자 중 15군데 선정하여 7천유로 지급
-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EXIST도입 (1998)
- 독일 정부는 1998년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EXIST (Existenzgründungen aus der Wissenschaft)를 도입하며, 20개의 창업 강좌를 개설

- '9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있음
- EXIST는 기업가정신 문화, 창업보조금(장학금), 기술이전의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업가정신) 창업관련 강의 개설, 창업 연구, 창업지원 등 대학 전반에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EXIST Start-up Grant: 창업보조금) 창업 아이디어를 진전시키는 기간에 학력에 따라 월 800~2,000유로를 최고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 추가로, 1인 창업자는 10,000유로, 팀 창업자는 17,000유로에 상당하는 장비를 지원. 또한 5,000유로의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0유로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
- (기술이전) 기술이전은 창업이전 단계에서 기술창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 우수한 연구의 결과를 지원한다는 점이 광범위한 창업을 지원하는 EXIST 창업보조금과의 차이임. 1단계는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하고, 사업의 착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최대 60,000유로와 1년 후 이 창업기업에 합류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도 최대 18개월간 추가 지원. 2단계는 시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을 때까지 최대 150,000유로를 지원
- 대학/중고등학생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10년 이후 독일 내 공대에 창업 강좌를 확대하고, 연방경제기술부도 창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고취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에 마련
 - “기업가정신을 학교로(Unternehmergeist in die Schulen)”: '12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5-19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창업정신을 심어주고 있음
 - 학생들의 사업아이디어에 구체적인 구현계획과 자금을 제공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목적
- 프라운호퍼, 스핀오프 지원 프로그램(Spin-Off-Förderprogramme)
 - 프라운호퍼 벤처창업팀(Fraunhofer Venture Team):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직원들이 연구소가 개발 및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Spin-Off 활동을 지원

- 스핀오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기술이 스핀오프를 통한 창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는 소정의 조건들(사업모델, 법률적 조건들, 비즈니스플랜 작성, 자금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자(또는 팀)를 조기에 발굴해, 이들 창업자(또는 팀)가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스핀오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990년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200여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업
- 뛰어난 산업 인적자원을 토대로 높은 창업역량 보유
- 높은 기술인력 숙련도, 인력 고용 및 직업 교육훈련이 체계화를 토대로 창업기업의 인력활용이 용이
- 인력 숙련도 69.3점으로 미국(75.8점) 다음으로 2위이며 유럽에서는 1위 수준. 직업훈련의 질/디지털기술 활용 능력 5.35점(2위)/5.15점으로 세계 2위 수준
- 실무형 교육 중심으로 고학력 인력보다는 필요 기술 중심의 인력활용이 가능
- 높은 수준의 창업률(특히 기업수 대비)
- 창업률(기업수대비/인구수대비)이 19%, 0.81%로, 미국(7.8%, 0.17%), 중국(19.6%, 1.53%), 일본(4.7%, 0.08%), 영국(12.9%, 0.57%), 한국(15%, 1.83%), 프랑스(12.9%, 1.04%)에 비했을 때 기업수 대비 창업기업수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인구수 대비 창업기업수 또한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2위 차지
- 신규 창업건수가 '0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 기존 사업체의 인수 및 상호변경 등을 제외한 순수 창업건수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 '04년 82만여 개였던 창업건수가 '19년 55만여 개로 급감함
- 다만, 폐업 건수 또한 '10년 57만여 개에서 '19년 50만여 개로 감소함
- 뛰어난 사업적/법적 인프라
- 사업적/법적 인프라 점수가 5.84점으로 미국(5.53점), 중국(4.65점), 일본(4.34점), 영국(5.1점), 프랑스(5.27점), 한국(4.23점)에 비해 세계 1위 수준

-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제도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업지원 인프라도 고도화되어 있음
- 전통 제조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 내 협력 체계가 우수
- 기업활동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인프라가 체계적이어서 사업활동에 대한 애로나 불확실성이 낮음

2) 성장

- 종합혁신프로그램(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또는 ZIM: 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2008)
 -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초기 창업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
 - '08년부터 시작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에 있어서 프로세스, 또는 기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지원 프로그램
 - 기존에는 3가지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ZIM-KOOP(공동연구), ZIM SOLO (단독연구), ZIM-NEMO(공동 네트워크 연구)
 - 이후 '15년 발표된 개선책에 따라 3개로 나누어 진 것을 통합하여 모든 프로젝트는 기업당 최대 38만 유로, 연구소는 19만 유로를 지원 가능.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500명 이상의 기업도 지원 가능하며 연매출 5천 만 유로의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
- 슈타인바이스(Steinbeis), 상용화기술 지원 프로그램
 -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완전한 상업기반위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연구 분야는 주로 제품을 상용화하는 응용기술의 개발
 - 총체적인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서부터 자금조달, 판로까지 기업 솔루션을 제공: 컨설팅, 기술이전을 위한 R&D, 직업교육 등 실시
 - 기술이전 수수료는 프로젝트에 따라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1차 진단단계는 무료이나 2차 본 사업부터는 유료. '19년에는 약 1억 7천만유로의 매출을 올림

- 강력한 산업기술 경쟁력
 - 제조, 기계 분야 등의 산업 응용 기술역량이 뛰어남
 - 유니콘기업의 수는 적으나 고성장기업의 수는 많아 창업기업이 높은 시장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인구대비 특허출원 수가 292.1건/1백만 명으로 유럽 내 가장 높은 특허출원 성과
- 유럽 1위 수준의 R&D투자
 - 연구개발 역량 99.2점(2위), GDP 대비 R&D 투자 2.9%로 유럽 국가 중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낮은 수준의 스케일업 기업 / 고성장기업 중심
 - 테크스케일업, 유니콘 기업의 수는 적으나, 전통산업 등에서의 고성장기업 비중은 가장 높은 편
 - 하지만, 고성장기업의 경우 35,636개로 1위 수준
 -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가치의 상승보다는 매출, 고용 중심의 기업성과 향상에 주력
- 높은 해외시장 진출 및 무역 세계화 수준
 - 유럽 내 최다 무역규모를 보유한 국가답게 무역 세계화 수준이 높으며 이를 토대로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최상위권
 - 무역 세계화 지수가 78점으로 세계 1위 수준이며 해외시장 진출 수준은 18%로 세계 3위 수준 기록

3) 재투자

- 독일 사회법 2권(Zwei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 재기지원금(Einstiegsgeld)
 - SGB II 제16b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장기기초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 외에 재기지원금(Einstiegsgeld)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재기지원금의 규모는 장기기초실업급여의 50%이며, 부양가족 1인당 10% 추가

나. 모험자본

1) 창업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독일 엑셀러레이터(German Accelerator) 설립 (2012)
 - '12년 독일 스타트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출범되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지원을 받아 독일기업가정신 유한회사(German Entrepreneurship GmbH)가 운영
 - '20년 현재까지 28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였으며, 이들이 유치한 자금은 2020년 9월말까지 49억 달러에 이름
 - 방대한 글로벌 조직 및 파트너이지만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 지원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이 92%에 달함
 - 지원대상은 상용화 또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을 개발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IP)을 가진 독일 기업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동시에 운영 가능한 자금과 인력 확보가 필수
- 독일 재건은행, 첨단기술창업펀드(HTGF, High-Tech Gr nderfonds) 설립 (2005)
 - '05년에는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술지향적인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일재건은행(KfW), 민간 대기업과 협력해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벤처캐피털투자사 High-Tech Gr nderfonds(HTGF)를 설립
 - 소프트웨어, 미디어, 인터넷, 하드웨어, 자동화, 헬스케어, 화학, 생명공학 등 산업 전 부문에 걸쳐 하이테크 창업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시드 자본 투자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
 - 현재까지 HTGF I, HTGF II, HTGF III 등 3개 펀드를 통해 총 8억 9250만 유로의 투자를 시행
 - 이 펀드는 주가상승차익취득(appreciation of shares)과 회수(exit)라는

벤처캐피탈 모델과, 기업 평가 없이 15%의 지분과 전환사채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정부 보조(subsidy) 프로그램 두 가지의 민+관 모델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

- 2005년 펀드 설립 이후 42명의 비즈니스 투자자(또는 투자기관)가 투자 544건을 시행해 104건의 회수와 2건의 IPO를 시행
- German Micro-Mezzanine Fund: 앱개발 등 소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투자(최대 5만유로)
- INVEST 프로그램: 엔젤투자자가 1만유로이상을 스타트업에 3년이상 투자시 투자자에게 2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유럽엔젤펀드 (European Angels Fund, EAF)
 - 약 80명의 엔젤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성장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
 - 엔젤투자자의 투자는 25만 ~ 500만 유로 수준
- 엑셀러레이터 121개, 인큐베이터 56개, 코워킹스페이스 791개 운영
 - 이는, 미국(각 666, 1400, 3762개), 중국(각 -, 4849, 304개), 일본(각 -, 500, 411개), 영국(각 159, 206, 1044개), 프랑스(각 56, 270, -개), 한국(각 208, 259, 229개)와 비교해볼 때 다소 낮은 수준임

2) 성장

- 독일 재건은행, 벤처캐피탈 코페리온(coparion) 설립 (2016)
 - 2016년에는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적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인 코페리온(coparion)을 독일재건은행(KfW)이 설립
 - 독일재건은행이 4,500만 유로, ERP 특별기금 1억 8,000만 유로를 투입하고 2018년 유럽투자은행이 추가로 4천만 유로를 투입
 - 첨단기술창업펀드가 벤처캐피탈과 정부 보조라는 혼합적 성격을 지닌데 반해 코페리온은 전적으로 벤처캐피탈 모델을 따름. 때문에 일반적 벤처캐피탈과 마찬가지로 각 라운드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가 가능
 - 2018년 10월 기준 25개 기업에 투자를 시행했으며, 민간 투자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성장단계의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 기업당 최대 1,000만 유로 투자 가능

- 독일 재건은행, KfW Capital 설립 (2018)
 - 2018년 10월에는 투자지원을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펀드를 넘어서 독일의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자회사인 KfW Capital을 설립
- Deutsche Börse Venture Network: 투자자와 기업가의 연결 지원
- ERP/EIF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ERP/EIF venture capital fund of funds)
 - 유럽투자기금(EIF) European Recovery Programme(ERP)의 벤처캐피탈 모태펀드로 성장기의 독일 기술 회사에 투자
 - 평균 투자 규모는 2,000만~6,000만 유로
- 다소 낮은 수준의 벤처투자시장 규모
 - 벤처캐피탈 투자 21억달러, 대체금융 13억달러로 미국(각 1,381, 611억 달러), 중국(각 243, 2,154억 달러), 일본(각 25, 11억 달러), 영국(각 32, 104억 달러), 프랑스(각 29, 9억 달러), 한국(각 39, 8억 달러)에 비해 벤처투자는 최하위권, 대체금융 중위권 차지

3) 회수

- 높은 수준의 M&A를 통한 회수비중(43%, PE기준)

5. 인도

□ 인도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3-5>과 같음

○ 인도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3-5> 인도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 기업	모험 자본
창업	-지방정부간 스타트업 지원 경쟁체제 도입 -Invest India, Startup India프로그램: 특허출원 방식 간소화 및 특허출원 비용 80% 감면 -Invest India, Startup India프로그램: '스타트업 인디아 허브' 포털 -Invest India, Startup India프로그램: 노동법 및 환경법 관련 감면제 등 창업 규제 완화 -Invest India, Startup India프로그램: 창업기업 3년간 소득세 및 세무조사 면제 - NIDH 프로그램 <민간> -큰 수요시장과 젊은 인구 구조 -빠른 경제 성장과 저임금의 우수한 인력풀을 토대로 세계 3위의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 -스타트업 창업 수 '15년 이후 영국 상회 -자국민 위주의 스타트업 창업(95%) -주가드(Juggad)정신을 통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IT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높은 비중 -높은 대출금리, 신규 창업 소요시간	- Invest India, Startup India프로그램: 투자유치 지원위한 펀드 조성(1조 6천억원) -인큐베이터 지원 프로그램 <민간>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등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국가 제조업 경쟁력향상 프로그램 <민간> -세계 4위 수준의 유니콘 기업 수 -낮은 수준의 GDP대비 R&D투자 비율(0.85%)	- Invest India, Startup India프로그램: 스타트업 투자자 투자이득세 3년간 면제 <민간> -후기 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집중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24%)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 비중 기준 세계 3위 수준
회수	<민간>	<민간>
재투자 (재도전)		-한국과 함께 낮은 수준의 엑시트 비중

가. 모험기업

1) 창업

- 지방정부간 스타트업 지원 경쟁체제 도입
 -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이 2018년부터 주(州)별 스타트업 순위를 매겨 주마다 더 나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
 - 36개 주 중에서 30개가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
- Invest India, Startup India 프로그램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기관 Invest India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Startup India를 운영하며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투자 등을 지원
 - Startup India의 스타트업 지원은 정부 정책 지원, 투자유치 지원, 사업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허출원 간소화 및 비용감면) 기술 개발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인도 창업 트렌드를 반영해 특허출원, 상표출원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50%에서 80%까지 환급
 - (모험자본-창업)(투자유치 지원) 인도 중소기업개발은행(SIDBI,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이 운영하는 약 1000억 루피(15억 달러, 한화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이용해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
 - (Startup India Hub) Startup India Hub를 통해 스타트업에 겪는 재무, 규제사항 등에 대한 법적 자문 및 애로 해소 등
 - (창업 규제완화) 인도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3년 동안은 총 6개의 노동법과 3개 환경법 준수와 관련된 감사가 면제되고, 자율인증으로 대체 가능
 - (소득세 면제) 인도에서 영업하는 스타트업은 회사 설립 후 최초 7년 중에 임의로 선정한 3년 동안 소득세 및 세무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모험자본-성장)(투자이득세 면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투자자는 투자 수익에 대해 3년간 면세

-
- NIDH 프로그램(NIDH: National Initiative for Developing and Harnessing Innovations)
 - NIDH프로그램 하, 혁신과 창업 발전 센터를 통해 20명의 학생들을 선정, 100만 루피를 지원
- 큰 수요시장과 젊은 인구 구조
 -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하여 대규모 수요시장이 뒷받침
 - 또한, 전체 인구의 60%가 18-35세에 해당하는 매우 젊은 국가임
 - 이러한 인구구조상의 특징을 토대로 매우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 빠른 경제 성장과 저임금의 우수한 인력풀을 토대로 세계 3위의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
 - 인도는 '10년대에 들어 적극적인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과 저임금의 우수한 인력풀을 토대로 빠른 속도로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중임
 - 미국 실리콘밸리에 비해 인건비가 4배나 싸고 우수한 엔지니어 인적자원이 풍부
 - 미국과 영국 등에 이어 세계 스타트업 상위권 국가로 부상
- 스타트업 창업 수 '15년 이후 영국 상회
 - 2015년 이후 인도의 스타트업 창업 수는 영국의 스타트업 창업 수를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스타트업 투자유치액 역시 영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산업무역진흥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에서 발간한 스타트업 국가 보고서 'States' Startup Ranking 2019'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 내 스타트업은 약 28,000개 이상
 - 특히 인도 스타트업 투자금액의 상승 폭이 투자 건수보다 크게 높아, 일부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의미
- 자국민 위주의 스타트업 창업(95%)
 - 일반적으로 주요국의 스타트업 창업가의 대부분은 자국 출신 중심이지만, 인도는

특히 그 비중이 높음

- 중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창업가와 CEO가 활동하는 시장이고, 인도, 일본, 한국, 미국은 본국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평가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6개국 중 인도의 자국 창업가 비중은 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가드 정신을 통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 인도의 다문화적 특징과 주가드(Jugadd) 정신 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창업 분위기가 조성
- 주가드는 인도의 기업가정신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힌두어로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
- 또한, 다양한 인종과 더불어 살아 경영할 때 다양성을 포용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익숙한 경향이 있음
- IT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
- 인도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기술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음
-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높은 비중
- '15년 기준,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4,300개(약43%), 비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5,700개(약 57%)
-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15년 4,300개에서 향후 '20년에는 11,500개로 증가 예상
- 높은 대출금리, 신규 창업 소요시간
- '16년 기준으로 인도의 은행 대출금리는 10.3%, 창업 소요시간은 30-60일로 주요국 대비 모두 높은 수준
- 가령, 중국은 각각 5.6%, 30일, 이스라엘은 3.9%, 13일, 일본은 1.2%, 10일, 미국은 3.3%, 4일임

2) 성장

- 중소기업 육성법(MSMED: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 인도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향을 제시
 - (개발 지원) 고용자, 기업가 등의 기술 개발(교육) 강화 / 기술향상(technological upgrade) 추진 / 마케팅지원, 인프라시설 지원, 클러스터 개발
 - (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 강화 /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지원 서비스
 - (보조금 지원)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강화
 -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지불지원 방지 / 주별 중소기업 육성위원회 설립
- 국가 제조업 경쟁력향상 프로그램(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
 - NMCP는 마케팅 지원, 인큐베이터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생산방식 효율화, 디자인개선 지원, 수출촉진 지원, 기술 및 품질향상 지원, ICT활용 지원, 교육훈련지원, 품질관리지원 등 10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교육 및 정보인프라 확충 등의 방식으로 진행
- 세계 4위 수준의 유니콘 기업 수
 - 인도는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유니콘 기업 수가 세계 4위 수준인 국가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가 발표한 2020-2021 인도 경제조사(Economic Survey 2020-21)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인도는 38개사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
 - 특히 분야면에서도, 꾸준히 강세였던 IT&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은 물론, 교육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도 유니콘 기업들이 증가
- 낮은 수준의 GDP대비 R&D투자 비율(0.85%)

- '14년 추정치 기준으로 인도는 GDP대비 R&D투자 비율이 0.85%에 불과
- 이는, 중국 1.9%, 이스라엘 4.2%, 일본 3.4%, 미국 2.8% 등의 주요국에 비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

나. 모험자본

1) 창업

- 인큐베이터 지원 프로그램
 - 인도 정부는 첫 단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하는 투자제안을 하고 있으며, 31개의 혁신 R&D 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큐베이터는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자금 1억 루피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등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 인도는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3대 도시에 전체 스타트업의 70%가 집중
 - 이는 3대 도시를 거점으로 글로벌기업 본사, IT공과대학 등 명문대학이 집중되어 있고, 교통 및 인터넷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
 - 특히 스타트업 메인 허브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인도 스타트업의 27%가 집중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벵갈루루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수는 총 4,373개였으며, 뭄바이는 2,707개, 델리는 3,495개
 - 델리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뭄바이의 경우 인도 내 핀테크 펀딩의 30%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성장

- 후기 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집중
 - 한국, 영국, 미국의 스타트업은 시리즈 A와 B의 투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우 시리즈 C 이후의 투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시장성이

확보된 스타트업으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

-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24%)
 - 중국 스타트업은 약 99%의 투자가 기업을 통해 이뤄지나, 인도의 스타트업은 약 24%가 개인 투자자로 개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세계 스타트업 투자 비중 기준 세계 3위 수준
 - '18년 인도 스타트업은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비중의 5.4%로 미국(58.5%)과 중국(16.2%)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3) 회수

- 한국과 마찬가지로 회수 비중이 높지 않음
 - 최근 10년간 엑시트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이에 대비 인도와 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비중은 상당히 낮음
 - 미국 표본기업의 약 6.8%가 인수 및 합병을 중심으로 엑시트에 성공하였으나, 인도와 한국의 엑시트 기업 비중은 각각 2.6%와 1.4%로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음

6. 이스라엘

□ 이스라엘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4단계와 모험기업, 모험자본의 두 정책 대상의 각 상호 조합에 대해 벤처기업 정책을 할당하면 <표 3-6>과 같음

○ 이스라엘 민간 벤처생태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정리함

<표 3-6> 이스라엘 벤처기업 정책 및 환경의 프레임워크 분석

	모험 기업	모험 자본
창업	-트누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자 지원 -독특한 군대 시스템을 통한 군대의 인큐베이팅 역할 및 창업 인재 육성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컴퓨터과학(CS) 교육 정책 -기업가정신 교육 센터 설립 <민간> -후츠파 정신을 토대로 한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 정신 -1인당 스타트업 수 세계 1위 -인구대비 벤처 창업률 세계 1위 -'20년 스타트업 친화적 국가 평가에서 세계 4위 달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스타트업군 보유	-요즈마 펀드(Yozma)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Technology Incubator) <민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자체 창업 보육 시스템, 창업 촉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다수의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먼저 성공한 창업가의 엔젤 및 멘토시스템
성장	-정부 각 부처 내 수석과학관실(OCS) 시스템을 통한 R&D연속성 및 전문성 구축 -혁신청, 연간 약 4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스타트업 R&D비용 지원 <민간> -GDP대비 R&D지출 세계 1위 / 1인당 R&D지출 세계 2위 -매우 높은 수준의 인구대비 과학기술자 수와 수준 -뛰어난 수준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형성(실리콘 와디)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전시킨 기술이전 시스템 -유니콘 수 30개로 세계 최상위권	-자국내 설립된 외국기업 R&D센터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국민 채용에 대한 급여의 25% 4년간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 정책 <민간> -발달한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스라엘 내 자체 R&D센터 구축 및 연구개발 협력 관계 형성 -매우 높은 벤처투자 중 해외투자의 비중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벤처투자 시장 규모
회수	<민간> -나스닥 상장 기업 수 세계 3위	<민간> -평균 4년반 정도의 짧은 엑시트 기간
재투자 (재도전)	-트누파 정책을 통한 정부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금 100% 지원 정책	

	〈민간〉 -다브카 문화를 통한 실패 용인 및 재도전 문화 -활발한 연쇄창업 활동	
--	--	--

가. 모험기업

1) 창업

- 트누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자 지원
 - 정부부처내 수석과학관은 트누파라는 벤처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전 필요한 자금의 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는 창업 초기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인큐베이터가 맡음
 - (모험기업-재도전)이를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사회가 지고, 창업자는 실패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문화에 기여
- 독특한 군대 시스템을 통한 군대의 인큐베이팅 역할 및 창업 인재 육성
 -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은 고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함
 - 입대하는 병사들에게 창업의 핵심 자질인 리더십, 팀워크, 위기상황 돌파 능력 등을 집중 교육
 - ‘탈피오트(talpiot)’라고 하는 이스라엘 과학기술 엘리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최상위권 50명의 고교 졸업생들을 선발해 히브리대에서 3년간 수학과 물리학, 컴퓨터,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6년간 군 복무를 하게 함. 해당 부대 출신들이 창업한 수많은 벤처들은 글로벌 기업에 고가로 팔려 나갔고,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도 다수
 - 사이버 정보를 담당하는 시모네 메타임 부대를 통해 20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최고의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육성, 군대를 마치면 대학에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창업
 -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젊은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국가적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컴퓨터과학(CS) 교육 정책

- 이스라엘은 1992년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SW 중심의 CS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 이를 통해 1994년 고교 과정부터 총 5단계(1단계에 90시간) CS 교육이 시작됨
- 1~2단계는 컴퓨터의 기초, 프로그램과 논리 등으로 구성, 3단계는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 등 실습이며 4~5단계는 데이터 처리, 사이버 보안 등 고급 과정
- 이스라엘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한 학년 10만여 명 가운데 절반인 5만여 명이 CS를 3단계까지 이수한다고 하며, 상위 15%는 5단계까지 이수. 이를 통해 고교 졸업생 중에서 SW를 자유롭게 다루는 인재를 매년 1만여 명이나 배출
- 2010년부터 중학교 단계에서도 CS 교육을 시작했으며, 전국 200여 개 중학교 가운데 올해 50여 개가 CS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
- 이와 같은 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통해 창업 활성화의 밑거름 마련
- 기업가정신 교육 센터 설립: 영세한 스타트업을 지원
- 후츠파 정신을 토대로 한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
- 히브리어로 당돌함과 뻔뻔함이라는 뜻인 후츠파 정신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이스라엘인 특유의 도전정신
- 중동에서 자연자원도 없이 인적자원만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 국민들은 도전정신과 창업 문화가 몸에 배어있음
- 이러한 도전정신을 토대로 지금까지 USB 드라이브, IP 텔레포니, ZIP 압축, 알약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방울토마토 등 수많은 혁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
- 1인당 스타트업 수 세계 1위: '20년 7월 기준 6,583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구수 약 880여만명에 대비할 때 세계 1위 수준
- 인구대비 벤처 창업률 세계 1위
- '20년 스타트업 친화적 국가 평가 세계 4위 달성: 스타트업 친화적 국가 평가에서 89/100점을 받아 캐나다,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스타트업군 보유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 특히 독보적인 스타트업군을 보유

- '18년 기준 500여 개의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포진

2) 성장

- 정부 각 부처 내 수석과학관 시스템을 통한 R&D연속성 및 전문성 구축
 - 196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경제부 산하에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두고 이스라엘 정부의 창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수행
 - 수석과학관(차관급)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6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R&D 정책 시행과 예산 배분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R&D정책의 연속성 보장
 - 수석과학관실은 5명의 헤드를 포함한 170여 명의 전문평가위원단을 운영하며 전문평가위원단은 모든 R&D 과제를 평가하는 구조
 - 초기 시기가 지나고 기술창업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 수석과학관실은 민영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만, 투자 규모가 크고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여전히 수석과학관실 주도로 지원
- 혁신청, 연간 약 4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스타트업 R&D비용 지원
 -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16년에 설립되었으며,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TIP: Technological Incubating Program)등의 다양한 벤처 지원 정책 운영
 - 민간 부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프로젝트에 주요 자금을 제공
 - 첨단기술을 가진 고위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 상황과 기술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수억 원의 보조금과 R&D 지원비를 스타트업에 제시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에 회사로부터 약간의 로열티를 받음
- GDP대비 R&D지출 세계 1위 / 1인당 R&D지출 세계 2위
 - '19년 민간 R&D 지출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한국과 공동 1위
 - OECD 국가의 R&D 지출 평균은 GDP의 2% 수준

- 높은 수준의 인구대비 과학기술자 수와 수준
 -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가 12명에 달하며, 고용인력 1만명당 과학기술자 수가 140명에 달함
 - 이는, 85명인 미국이나 83명인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는 수준
- 높은 수준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형성(실리콘 와디)
 - 실리콘 와디는 텔아비브 중심의 이스라엘 동부 해안 지역 정보기술(IT) 클러스터 지역을 지칭
 -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 벤처기업 4000여 곳, 200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벤처투자자,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등이 모여있음
- 이른 시기부터 발전시킨 기술이전 시스템
 - 대학의 연구 결과를 세계에서 처음 상품화한 것이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대학은 기술 이전 회사를 보유
 - 와이즈만 연구원은 1959년 기술 이전을 위한 '예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 이상의 수익 달성
 - 히브리대는 1964년 '이숨'이라는 기술 이전 회사를 설립하여 53년간 9,820개의 특허와 2,750개의 발명을 통해 얻은 880개의 라이선스를 기업에 넘김

3) 회수

- 나스닥 상장 기업 수 세계 3위
 - '21년 4월 기준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98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
 - 자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많은 수준
 - 이처럼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창업으로의 재투자도 활발해지는 선순환

4) 재투자

- 트누파 정책을 통한 정부의 초기 스타트업 투자금 100% 지원 정책
 -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100% 투자금으로 운영되며,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법적 의무만 성실히 수행했다면 개인이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
 - 창업 전 필요한 자금의 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는 창업 초기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인큐베이터가 맡는 구조
 - 대출이 아닌 투자방식이므로, 실패해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실패 용인 및 재도전 문화 조성
- 다브카 문화를 통한 실패 용인 및 재도전 문화
 - 다브카는 히브리어로 ‘그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실패해도 괜찮으니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라는 뜻
 -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진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창업을 개인의 영리 추구보다는 공공 발전의 성격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활발한 연쇄창업 활동
 -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
 - 첫 창업 때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실패를 경험하게 한 뒤에, 두 번째 창업 때는 기존에 비해 20%까지 증가한 투자금을 지원
 - 이를 통해, 하나를 빨리 키워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방식의 연쇄창업이 활발함
 - 여러 번 재창업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쌓은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인 엑시트(Exit) 규모도 커졌고, 생태계도 성숙해짐

나. 모험자본

1) 창업

- 요즈마 펀드(Yozma)

-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정부가 40% 투자하고 민간이 60% 투자한 정부벤처펀드인 '요즈마펀드(Yozma Fund)'를 출시
-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모태펀드
- 1993년 설립 당시에는 1억 달러로 시작했으나 2013년에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
- 정부가 갖고 있는 벤처기업 정보 공유,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 벤처캐피탈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기술 창업 위주의 투자 대상 선정, 해외 벤처캐피탈의 LP참여 장려 등으로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금이 스타트업계에 유입되도록 하는데 기여
- 요즈마 그룹은 글로벌 자본 유치, M&A를 통한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Technology Incubator)
 - 1990년대 초, 국가과학위원회를 통해 인큐베이터를 선정해 신생벤처를 지원
 - 주요 도시 24군데에 기술 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시했고 과학자, 교수들이 학교와 연계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큐베이터는 2년간 초기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8%에 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종가에서 초기단계까지 회사를 육성하여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
 - 지금까지 1,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터를 졸업했으며, 이들 중 45% 이상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유치
-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자체 창업 보육 시스템, 창업 촉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 이스라엘은 내수시장이 작고, 이슬람을 믿는 주변국들과는 공식적인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창업 순간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함
 - 또한, 구글, MS, IBM 등 전세계 혁신 글로벌 대기업과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은 이스라엘에서 신생 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

시스템이나 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

- 다수의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 '20년 기준 369개의 엑셀러레이터, 24곳의 인큐베이터가 운영 중
 - 예루살렘 벤처파트너스와 아워클라우드 등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고 초기 투자에 앞장서는 다수의 벤처캐피탈들이 존재
- 먼저 성공한 창업가의 엔젤 및 멘토시스템: 이스라엘에서는 엔젤 투자는 자금의 투자자이며 동시에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이미 성공한 선배들이 앞서서 창업한 후배들의 멘토를 자청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음

2) 성장

- 자국내 설립된 외국기업 R&D센터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자국민 채용에 대한 급여의 25%를 4년간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 정책
- 발달한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스라엘 내 자체 R&D센터 구축 및 연구개발 협력 관계 형성
 -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스라엘에 R&D 또는 혁신 전문센터를 운영(Microsoft, Motorola, Google, Apple (3개의 R&D 센터), Facebook, Berkshire-Hathaway, Intel, HP, Siemens, GE, IBM, Philips, Lucent, AOL, Cisco, Applied Materials, IBM, J&J, EMC, Toshiba, Tata, Kodak, Citi Bank등)
 - 포르쉐는 '17년 7월 최신 기술 트렌드와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노베이션 오피스를 설립했으며, 다임러와 제너럴모터스(GM)도 이스라엘에 연구·개발(R&D)센터 설립-
- 매우 높은 벤처투자 중 해외투자의 비중
 - 이스라엘은 해외투자자가 전체 벤처투자의 약 87%로 비중이 매우 높음
 -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만 2,300개사 이상이며,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장 많이 눈독을 들이는 스타트업을 가진 나라

- 실제로 '17년 3월, 인텔은 153억 달러에 이스라엘의 자그마한 스타트업 모빌아이를 인수했으며, 당시 인수 금액은 이스라엘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음. 이 외에도, '17년 12월 현대자동차의 옵시스 지분 9.7% 인수, 포드의 머신러닝 기업 SAIPS 인수 등의 사례가 있음
- 또한, '13년에는 구글이 내비게이션 스타트업 '웨이즈'를 한화로 1조원이 넘는 돈에 인수하기도 함
-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벤처투자 시장 규모
- '18년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17년에 비해 17% 증가한 6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년에는 829억 달러에 달하며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3) 회수

- 평균 4년반 정도의 짧은 엑시트 기간
- 우리나라가 평균 10년이 걸리는 반면 이스라엘은 평균 4년 반 정도
- 빠른 엑시트 환경은 활발한 재창업으로 이어져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등 이스라엘의 투자 생태계를 성장할 수 있게 함
- KOTRA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엑시트 건수는 2010년 319건에서 2019년 522건을 기록함

7.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초기단계 모험자본시장의 기술벤처에 대한 인내자본 보완 필요

- 미국의 초기단계 모험자본시장과 한국의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정부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고도의 기술기업에 위험을 감수하는 장기 인내자본을 제공한다는 점
- 한국의 초기단계 모험자본시장이 정부 주도로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마중물을 널리 퍼뜨려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이라면, 미국 정부는 초기단계 모험자본에 대해 특정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
 - 미국 CIA의 공적 벤처캐피탈인 인큐텔은 현재 애플, 구글 등의 비즈니스 모델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옴
 - 기술 개발에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힘든 장기적 자본을 소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적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
 - SBIC 프로그램도 미국의 취약계층, 지방 등 특수목적성을 지니고 특정 부문을 확장시키기 위한 자금 공급 실시
- 한국의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선택과 집중의 영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성장 단계 모험기업에 대한 해외 연결 지원 필요

- 유니콘 기업 개수로 선정한 비교대상 7개국 중 인구수 1억 명 미만의 소규모 개방 경제인 경우는 한국, 이스라엘, 독일 세 국가에 불과함
 - 특히 미국, 인도, 중국은 전부 내수시장의 규모가 인구 10억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The Billion Economy”를 기반으로 함
- 이스라엘의 경우 작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와의 네트워킹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창업 순간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동종업계와의 네트워킹 추진

- 그 결과 이스라엘의 벤처 투자에서 해외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음
 - 이스라엘은 해외투자자가 전체 벤처투자의 약 87%로 비중이 매우 높음
- 한국의 사례에서도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특히 해외 동종업계 CVC로부터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지피클럽과 엘애피코스메틱은 중국 시장을 무대로 삼으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엘애피코스메틱은 전략적 투자자인 랑시그룹의 지원 아래 성장하고 레전드캐피탈도 엘애피코스메틱의 중국 진출과 확대를 지원함
- 본글로벌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확보와 연결을 지원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

라. 성장 및 회수 단계에서 산업계 모험자본의 역할 부족

- 전세계적으로 CVC는 모든 벤처캐피탈 투자의 거의 1/4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음
-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CVC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벤처투자시장의 과제로 여겨지는 회수시장 활성화에 CVC 투자가 기여하기 때문
- 벤처투자에서 CVC 투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M&A를 통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
 - CVC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조사에서 26%의 CVC가 모기업과 잠재적 M&A 대상의 관계 형성이 목적이라고 답함(Herman Kienhuis, 2019)
 - 미국 상위 CVC 10여 개를 대상으로 한 2011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 CVC 투자 금액, 투자 횟수는 모기업의 인수 빈도와 양의 관계를 보임(김명건 외, 2019)
- 즉 기업이 기업을 키우는 모험자본시장이 형성될 때 비로소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며 국내 산업계가 모험자본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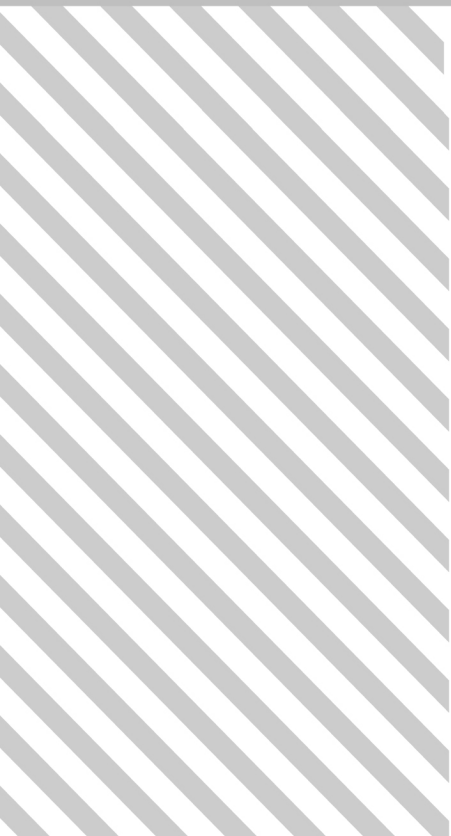
다. 재투자 단계의 문화적 기반 조성 필요

- 재투자 단계의 성공한 창업자의 역할 모델 정립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기보단 해당 국가 내 문화와 기업가 정신의 성숙함에서 비롯됨
 - 페이팔 마피아 등이 미국 벤처 생태계 내 성공한 선배 창업자의 길을 제시하고 롤모델 역할을 수행
- 벤처기업 생태계의 성숙해가면서 참여하는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 수준도 함께 성숙해갈 수 있도록, 성공한 선배의 재투자 및 재창업 대표적 사례에 대한 홍보와 롤모델 정립, 문화 확산 노력 필요



결론 및 정책 제언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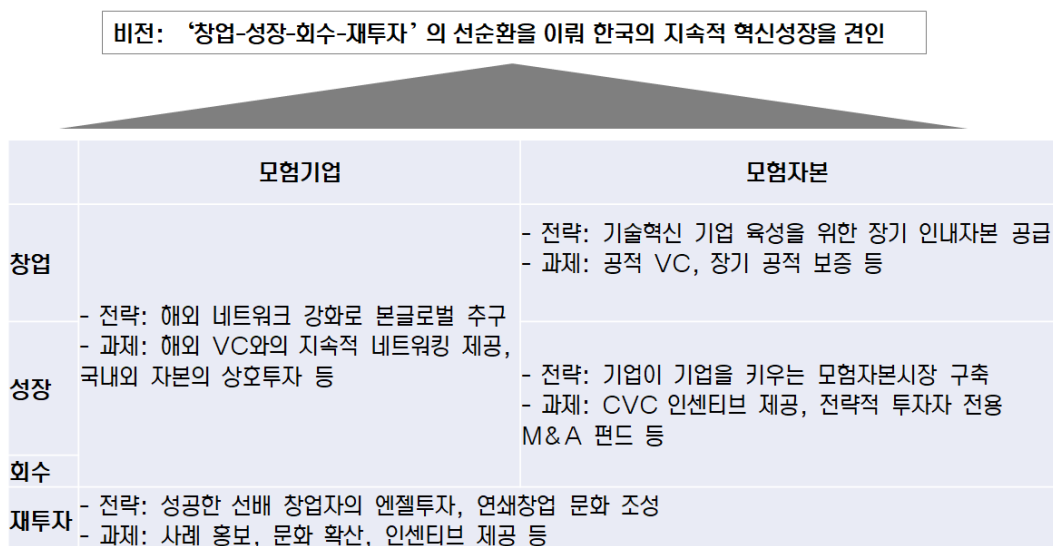
- 
1. 해외 네트워크 강화로 본글로벌 추구
 2.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
 3. 기업이 기업을 키우는 모험자본시장 구축
 4. 성공한 선배 창업자의 엔젤투자, 연쇄창업 문화 조성

결론 및 정책 제언

벤처기업 육성 3개년 계획 수립 연구

- 3장의 분석 결과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 및 생태계 전반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 모험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해외 기업 및 자본과의 네트워크 자산 축적이 저조함
 - 해외 시장 진출에서 네트워크 자산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판로 개척, 시장 확장 등의 첫 단추임
 - 기존 해외 진출 정책에서 네트워킹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함
 -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의 역할 부재
 - 민간에서는 회수 위험이 크고 투자에 장기가 소요되는 미래 기술 산업에 투자할 유인이 적어, 공적자금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현재 모태펀드 등 대부분의 자금이 선택과 집중보단 시장의 전체적 확장을 추구하는 형태로 집행됨
 - 기업이 기업을 키우는 모험자본시장 구축
 - 산업계의 모험자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때 한국 회수시장도 고도화될 수 있음
 - 성공한 선배 창업자의 엔젤투자, 연쇄창업 문화 조성
- <그림 4-1>은 위와 같은 분석을 고려하여 한국의 벤처기업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비전과 전략,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1〉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CVC 및 M&A 활성화 방안의 체계



1. 해외 네트워크 강화로 본글로벌 추구

- 다수의 기존 연구는 기업가치와 총 가용시장(TAM)의 크기가 뚜렷한 비례관계를 지님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에 가치가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자주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 한국과 비슷하게 소국 개방경제인 이스라엘의 경우 동종업계 미국 기업 및 벤처캐피탈들과 정기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제공함
- 벤처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재무적/전략적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축적을 지원해야 하며, 한국벤처투자의 해외 지사를 활용하여 국가간 모험자본이 상호 국가의 스타트업에 투자되도록 일정 부분을 할애함
 - 네트워킹 축적 지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
- 미국과 같은 주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이미 축적된 네트워크 자산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외 체류자의 창업 시 정부지원사업 수혜에 규제사항이 없도록 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2.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

- 한국의 유니콘 기업 중 유일하게 바이오 분야 기술 기업인 에이프로젠은 유니콘 기업에 도달하기까지 19년 정도 평균(약 8년)보다 두 배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됨
- 이는 기술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가 기술 기반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그만큼 장기적 금융 지원이 필요함
- 특정 기술 분야는 모태펀드에 10년 이상의 장기펀드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첨단 미래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공적 벤처캐피탈을 활용한 정부의 직접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미래기술 투자를 선도하여 공공재적 성격의 첨단기술을 선점해온 미국 인큐텔(In-Q-Tel) 사례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큐텔은 '99년 CIA국장(George Tenet)이 첩보활동에 필요한 민간 부분의 첨단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공적 벤처캐피탈이다.
 - 다만 주의할 점은 공적 벤처캐피탈이 ① 국가의 백년지대계 측면에서 기술개혁의 동기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작동해야 하며, ② 민간의 조직처럼 운영되어야 함
 - 공적 벤처캐피탈의 경우 초기투자 시장을 확장하고 주도하기 위해 존재하기보다, 민간의 자금은 고위험으로 진입하지 못하지만 미래한국을 위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신기술 분야 투자에 적합함
- 공적자금의 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초기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및 벤처투자시장의 확장에 목적을 둔다면, 공적 벤처캐피탈의 직접투자는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지원의 역할을 수행

3. 기업이 기업을 키우는 모험자본시장 구축

□ 기업의 벤처투자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법제의 개선 필요

○ 모기업이 CVC가 결성한 펀드에 출자 시 세액공제 혜택 배제, 외부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더라도 5년 이내 지배관계 되면 공제 회수, 피투자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될 경우, 각종 세제혜택 적용 배제 등의 문제 해결 필요

□ 기업의 벤처투자에 세제혜택 부여하여 벤처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기업의 벤처투자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법제의 개선을 넘어서, 이를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제로의 진보를 이뤄야 함

- 일반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3, 제12조의4)도 현행 1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확대
- 일본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사례처럼 10억 원 이상의 투자에 대해 25%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도 고려 가능

[기업의 벤처투자 세제혜택 사례] “일본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일본의 2020년 성장 전략은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는 ① 창업 10년 미만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기업 또는 CVC의 1억 엔 이상의 투자 또는 ②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에 의한 1000만 엔 이상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창설 내용을 포함함. 예를 들어 소득액 1억 엔, 자본금 1억 엔 이상인 기업이 스타트업에 1억 엔을 출자하는 경우 580만 엔의 법인세를 감면하게 됨. 이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CVC 자금의 공급을 촉진.

□ 전략적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Pre-M&A 펀드 조성

○ 모태펀드 내 M&A를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하기 원하는 기업 출자자 중심의 Pre-M&A 자펀드를 위한 전용리그를 마련하여 자금 공급

- 기업이 M&A를 원하는데 바로 실행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M&A 펀드에 출자하여 피투자기업을 좀 더 가까이서 알아보고 향후 M&A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펀드 규약 등을 활용한다고 함
- Pre-M&A 자펀드의 운용사 및 출자자 : 운용사는 CVC 또는 일반 벤처캐피탈도 가능하며, 신청 시 LP 리스트에 필수적으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함
- 투자 대상 : 중견기업 LP가 M&A 대상으로 염두하고 있는 중·후기 스타트업
- 인센티브 :
 - 자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IPO·M&A 등 지분매각 시 LP로 참여한 중견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M&A 선점 지원
 - 펀드 청산 시점이 되었을 때 참여한 중견기업 LP 중 피투자기업 풀 안에서 M&A를 성공하면 운용사에 성공보수 부여
- 기존 모태펀드 내 M&A 전용펀드와의 차이점 :
 - 기존 M&A 전용펀드는 주로 후기 단계 재무적 투자자들의 리그로 M&A를 원하는 일반기업들에 특화된 유인책은 없음
 - Pre-M&A 펀드는 출자자들이 함께 M&A 대상기업을 찾고 알아보는 전략적 유인이 강함

4. 성공한 선배 창업자의 엔젤투자, 연쇄창업 문화 조성

-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성공한 선배의 재투자 및 연쇄창업 경향은 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성공한 창업자가 엔젤투자자 또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연쇄창업자로 활동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성
 - 선배창업자와 후배창업자 간 네트워킹 또는 멘토링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이 이러한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수많은 창업자가 쫓아갈 수 있는 롤모델 제시하여 벤처기업 생태계가 성숙한 기업이 정신과 함께 개선되어나가기도록 유도함